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이애리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협동연구팀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2645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최진욱...[등저]. — 서울 : 통일
연구원, 2004

p. ; cm.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4-16)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73-X 93340

911.0099-KDC4

951.9-DDC21

CIP2004002325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한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60만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210만 명, 중국 210만 명, 일본 90만 명, 러시아(독립국가연합) 60만 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6,000만 명), 중국(2,500만 명), 이스라엘(1,800만 명), 멕시코(1,800만 명), 우크라이나(1,2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 명)나 일본(260만 명)보다도 많은 수이며,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7.5%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해외 한민족 사회의 형성 연원이 오래 되었고 이주 배경도 다양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한민족 동포사회가 점차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체제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포사회는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정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다. 즉 각국에 존재하는 한민족 사회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를 말한다.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공동대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한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실태를 분석한다.

1. 일본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한 재일 한인사회는 대체로 하층 노동계층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며, 대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는데, 1945년 종전시 약 200-24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명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 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으나,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 한인사회는 분열되고 대립하였다.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 「신조선건설동맹」(건동) ➡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즉, 재일 한인사회는 비극적인 한국근대사의 쓰라림과 민족의 분단의 아픔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재일 1·2세 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고, ‘일본사회에 정착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동화·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거의 사망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 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일본 정주생활에 따른 동화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3·4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일 한인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한인 3·4세대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이념 등 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즉, 재일한인 3·4세대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으로의 귀화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외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

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및 긴장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단과 조총련간의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있고,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영향으로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즉 국적 전환을 한 한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조총련계 한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민단계 한인들과 조총련계 한인들의 화해·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재일한인 2·3·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로 인하여 민단과 조총련이 조직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들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민단·조총련의 교류 증대는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인사회에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도일하여 정착한 소위 ‘뉴커머(new comer)’ 그룹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본에 왔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국과의 연계아래 일본속의 현대한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과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화해·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단·조총련·뉴커머 등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협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는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한·일 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발전과 더불어 한일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문화적 상호이해의 증대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구축에도 매우 중요하다.

2.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조선족이 오늘의 중국 영토에 이주하여 집단적인 군락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에서 1940년대까지에 걸친 시기이다. 중국 조선족들의 이주 시기는 대체적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조선조 중엽부터 대한제국의 초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이며, 제2기는 ‘한일합방’ 이후에서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까지이다. 중국내 조선족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내 조선족들은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 일부의 중국 내 한민족들이 조선인 또는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한다. 중국 내 한민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조상의 나라일 따름이지 모국은 아닌 것이다.

중국 내 한민족들이 자신을 중국 국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중국경제·정치적 주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계인’(border person)으로 살고 있다. 장기 이주의 인생역정을 통해 2가지 이상의 민족적, 문화적 범주 속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 정체감의 사이에 위치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내 한민족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중국내 조선족 사회는 세계 한인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치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 한민족사회는 여타 지역의 한민족사회에 비해 강력한 공동체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집단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변자치주와 장백자치현 등은 중국 한족사회와 격리된 폐쇄적 농촌공동체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민족은 중국 동북지역에 벼농사를 전파하였는데, 물줄기를 따라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논농사를 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내 조선족 자치지역에서 한민족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한족을 이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한민족사회 와해의 또 다른 원인은 타 민족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낮다는 점이다. 조선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 유지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내 여러 소수 민족 중 조선족은 고국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1980년대 이래 경제건설과 반패권과 함께 국가통합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해 온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장과 시장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인하여 중국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은 당 통일전선부와 국무원 장관급 부서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내 여러 민족과 계층을 통합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넷째, 중국 조선족은 높은 교육·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중국 내 한민족은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민족으로서 버려진 땅을 일구어 개혁·개방기 이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재중 한 인들은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족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문화민족이다. 한민족은 문맹률이 낮고, 대학생 비율도 중국 내에서 가장 높다.

3. 연해주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은 1860년대 초 가난을 못 이겨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되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까지 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1956년 중앙아시아 역류가 해제되면서 조금씩 연해주로 돌아오기 시작하던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재이주하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였다. 연해주 한인들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연해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연해주 한인사회는 한국의 연해주 진출에 큰 자산으로 간주된다.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협력 상대인 동시에 경제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연해주와 접경국으로서 만주 지역에 엄청난 인구로 인해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860년 북경 조약 이전 이 지역이 중국 영토였다는 점에서 더욱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러·일전쟁의 경험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북방 4개도서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 대상이다.

과거 중국과 수교후 중국진출시 중국내 조선족 사회가 한국의 중국진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한국의 러시아 진출에는 고려인 사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들은 정체성이나 언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연해주의 다민족 문화 속에 한민족 공동체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 연해주 지역은 다양한 한인이 거주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 경계를 넘어서 상호 협력을 시도하기 위해 접촉하기 시작한 접경지대이다. 한인들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민족이 민족내부 관계를 잘 처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해주는 중앙아시아, 사할린, 남북한 등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한민족이 모여서 협력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중국시장의 예에서 보

듯이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이 함께 일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연해주는 한민족 협력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연해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 지역 통합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러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며 긴장요소가 잠재해 있다. 우선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발해의 영토였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각별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 또한 한인 최초의 이민지이고, 중앙아시아 거주 한인들의 원고향으로 이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 내에서 간도협약이 무효이며, 1860년 중국이 조선령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한 것도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장차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자치구 문제를 안고 있다. 1993년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한인들의 명예회복과 거주지 원상회복의 권리가 부여된 것을 계기로 한인들의 민족 자치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한인들에게 자치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1998년 연해주지사는 「연해주에 소재한 해체된 군사도시를 연해주 고려인재생기금에 이양하여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는 공문을 고려인 재생기금 앞으로 보냈다. 이는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고려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환영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따라 브즈드니젠카, 라즈돌노예, 포포프카, 플라토노보, 오레호보 등 5개 소가 고려인에게 주어졌다.

4.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민족 사회는 국가별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국가 내에서도 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주 1세대와 이후 세대간에는 정체성 보존과 현지동화의 정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거주국 정부의 동화정책과 다문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정체성 보존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이주할 시기의 모국 문화를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한인들은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나는 거주국에 대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며, 또 하나의 이중 정체성은 남한과 북한 어느 쪽과 보다 동질감을 느끼는가이다.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결혼 등에 있어서도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나, 일본과 중국의 한민족 역시 최근 정체성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간다는 세대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민족 정체성 및 한인사회의 동질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약한 반면, 중국은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탈냉전 이후 민족 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에 의해 모국어를 상실하고 철저하게 러시아화를 거쳤다. 그러나 연해주의 한인사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뿐만 아니라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며,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3국 중 민족정체성은 가장 약하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한인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 덕분에, 조선족 사회는 모국어 교육을 공식

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으며 모국어를 보존할 수 있었다. 결혼도 대부분 조선족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중국 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은 동북3성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거주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한민족 사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일본의 한민족 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직업이나 업종 그리고 전체 국민 대비 평균 소득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다.

동북아 3국의 한민족 사회가 한민족 공동체에 갖는 관심은 유사할지라도, 그들의 실질적 참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 정도와 한민족 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는 재일동포에 비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훈련도 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참여 요청을 받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일본에 비해 거주국의 눈치를 보다 많이 살피게 될 것이다.

향후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시 이와 같은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 및 구성	7
II. 일본내 한민족 사회	9
1. 재일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11
2.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28
3. 재일 한인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51
III. 중국내 한민족 사회	55
1.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58
2.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실태	71
3.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83
IV. 극동 러시아내 한민족 사회: 연해주를 중심으로	93
1. 연해주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97
2. 연해주 한인사회의 실태	110
3. 연해주 한인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122
V.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비교분석: 정책적 함의	129
1. 공통점	131
2. 차이점	135
참고문헌	1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5

표 목 차

<표 III-1> 1982~1990년 일부 도시의 조선족 인구 변화	74
<표 III-2> 연변자치주 내 조선족 비율 변화	86
<표 IV-1> 1989년 소련 내의 한인 분포	107
<표 IV-2> 연해주 한인의 출신지별 구성	110
<표 IV-3> 연해주 고려인의 지역별 집계	112

I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6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210만 명, 중국 210만 명, 일본 90만 명, 러시아(독립국가 연합) 60만 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6,000만 명), 중국(2,500만 명), 이스라엘(1,800만 명), 멕시코(1,800만 명), 우크라이나(1,2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 명)나 일본(260만 명)보다도 많은 수이며,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7.5%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1860년대 초 가난을 못 이겨 국경을 넘어 간도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이민이 시작되었고, 한일합방 이후 정치적 이유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면서 확대되었다. 일제 강점 하에서는 징용과 징병으로 인해 타의에 의한 집단 거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많은 한인들이 귀국하기도 하였으나, 냉전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혀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후에도 해외유학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혹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안보불안 등으로 인한 해외이주는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해외원정출산과 조기유학, 국내에서의 조기 실직 등으로 인한 자의반 타의반식 이주라는 새로운 풍속도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해외 한민족 사회의 형성 연원이 오래 되었고 이주 배경도 다양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한민족 동포사회가 점차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체제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포사회는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정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려는 전

략적 구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경쟁과 통합의 동학(dynamics) 속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오랜 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제 침체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적 도전 속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분단 극복문제는 지속적인 도전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과제 수행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도전으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의 경제는 디지털 기술에 토대를 둔 디지털 경제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말하며, 정보가 중심이 되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는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이라는 전통적인 공유점 이외에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면 그 경제적인 규모는 더욱 확장된다. 이 지역의 인구 합계는 15억 명이 넘는 규모로 세계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적 측면, 문화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EU나 NAFTA에 비해 큰 손색이 없어 향후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인문적, 문화적 인식의 공유점을 넓힐 때, 더욱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식공동체 내지는 문화공동체적 관점의 경제적, 국제정치적 관점과의 결합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호기심 및 열기의 증대와 이에 대한 지적 탐구의 시작은 21세기 국가 상호의존과 정

보화 시대의 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조그만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주관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동북아시아 국가의 각 구성원과 그 전체의 구조를 관통하는 규범, 제도, 문화 등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공동체’의 개념과 그 구조가 담을 내용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라는 구조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하위 구성소인 동북아 차원의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지향점인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연계된다. 다시 말해,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정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의 인식적, 문화적 배경으로서 동북아 한민족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계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한민족이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민족적 발전전략으로서 한민족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류의식을 가지는 상당한 규모의 동포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전반기의 한국민족주의의 화두가 자주독립이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통일이었다면, 21세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는 한민족공동체가 될 것이다.¹ 해외의 한민족 사회가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에서 고국에 대한 민족의식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¹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12권 2호 (2002), p. 11.

통해 내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경제·문화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다.² 즉 각국에 존재하는 한민족 사회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를 말한다.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공동대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한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실태를 분석한다. 첫째, 19세기 말엽과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민족사회의 연원과 형성, 변화 과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한다. 둘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민족 사회의 현지 적응 실태 및 문제점, 한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한민족사회의 조직과 활동, ②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현지 사회로의 동화 실태, ③한민족 동질성의 유지 정도, ④한민족 사회 내부의 문제점, ⑤한국정부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와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 그 동안의 이들 사회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국내 기관의 조직, 활동 등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 각 지역의 한민족 사회의 실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민족간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본국 한국과의 교류·협력 등 관계 발전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² 위의 논문, p. 9.

2. 연구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첫째, 기존 연구 및 각종 기관의 해외동포사회에 대한 활동에 관한 문헌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해외동포사회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에 기초하여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일본, 중국, 러시아 한민족 사회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에서는 한민족 문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과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연해주의 경우는 생활상을 조사하기 위해 한인들의 시장, 농장, 가정집 등도 직접 방문하였다. 또한 거주지 소수민족 정책 담당자들과도 인터뷰를 통해 한민족에 대한 거주국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셋째, 각국의 한민족 사회의 실태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역전문가 등을 활용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 및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동북아평화연대의 도움이 많았다. 동북아평화연대는 현지 조사 일정과 통역, 안내 등을 주선해주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이다. 제 2, 3, 4장은 각각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실태를 분석한 후 한민족 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II

일본내 한민족 사회

1. 재일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가. 해방전

1910년 한일합방 전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불과 수백 명의 한인들이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³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몰락한 농민들의 일본사회로의 유입과 더불어 재일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재일 한인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⁴

재일한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배 시기에 한반도 농촌의 몰락에 의해 배출된 이농민이 일본의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유입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1937년 11월 중·일전쟁의 개시에 따른 전선의 확대에 인하여 전시노동력의 증대가 요구되고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령의 공포와 더불어 1939년 7월 노동력 동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한인들이 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열도에 유입되게 되었다.

(1) 한일합방과 재일 한인사회의 형성

1876년 부산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한반도를 내왕할 수 있었지만, 대한제국의 한인들은 일본정부가 1899년 2월에 발표한 칙령 제352호 ‘외국인노동자입국제한법’에 의해 자유롭게 일본을 내왕할 수 없었다. 즉, 일본정부는 한인과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인의 일본 입국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게다가 일본이 1914년 제1차 대전의 연합군에 가담하여 군수공업 중심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한인들은 저임금의 노동자로 일본에 들어

³ 1902년 재일한인의 수는 236명이고, 1909년 재일한인수는 790명으로 나타나 있다. 森林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東京: 法務研修所, 1955) 및 이문용, 『세계의 한민족 일본』(서울: 통일원, 1996).

⁴ 이문용, 『세계의 한민족 일본』.

가게 되었다.

한일합방이후, 한인들은 대체로 (1) 일본의 선진 근대문화와 경제발전, (2) 일본인의 금융과 토지수탈, (3) 노동인구의 절대 증가 등의 이유 때문에 도일하게 되는데, 특히, 도시금융침식, 토지수탈 등의 식민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한인들의 도일이 급증하였다.⁵

일본의 근대화 및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들이 도일하였고, 일반 노동자들도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한 일본에서 구직이나 돈벌이를 위해 도향 또는 밀항을 하였는데, 한인 노동자들의 일본으로의 도일은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조사사업이 전개되어 토지수탈이 추진되면서 급격하게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인 지주 등이 중심이 된 한반도의 토지수탈 과정에서 농민들은 영세화에 의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일본의 각종 회사들의 노동자 모집에 응해 도일하였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천 명의 한인들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면서, 많은 노동자가 한반도로 귀환하였다.⁶

이후 일본정부는 국내 만성적 불경기 및 실업문제 방지, 경찰의 감독과 통제라는 치안문제 등을 이유로 1925년 8월부터 부산항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도향저지제도를 실시하였다. 1925년부터 1938년까지 도향저지자의 수는 890,854명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배출되는 과잉인구의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도향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즉, 재일한인은 1931년 31만 명, 1934년 50만 명, 1938년 80만 명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재일한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본에 이주하여 일본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저변층을 형성하면서 한인사회를 이루어 갔다.

⁵ 전준, 『조총련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72).

⁶ 1922년에 46,326명의 노동자가 귀환한 데 비해, 관동대지진 직후인 1923년에는 거의 2배가 넘는 89,745명의 노동자가 귀환하였다.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2) 강제연행과 재일 한인사회의 형성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해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11월 중·일전쟁을 야기하였고, 1941년 12월에는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전선의 확대에 따른 병력과 일본 본토의 전시 군수산업의 노동력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령의 공포와 더불어 1939년 7월 노동력 동원계획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조선총독부에 ‘조선노무자 일본 본토 이주에 관한 건’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1939년 7월부터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한인들은 강제 연행되어 일본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즉, 한인노동자는 주로 힘든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석탄광산, 금속광산, 토목공사 등에 강제연행 되었는데, 위험이 큰 갱 속에서 작업하는 인부의 60-70%가 한인노동자였다.

이처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연행된 한인노동자의 인원은 724,787명인데, 여기에 군인·군속 365,263명을 합하면 한인 강제 연행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⁷ 전체 재일한인의 수는 200-240만정도로 추산 된다.⁸

그리고 이들 재일한인들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고, 경제 상태는 하층 노동계층에 속했으므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즉, 하층 노동계층의 수준에 있었던 재일한인들은 일본사회에서 격리되고 폐쇄된 병리사회를 형성해 살았던 것이다.⁹

나. 해방후

1945년 종전시 재일한인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대체로 200-

⁷ 위의 책.

⁸ 森林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⁹ 전준, 『조총련연구』.

24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명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¹⁰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 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연맹」이 좌파세력들의 세력 확산 공작으로 인하여 좌경화로 기울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우파 민족주의 재일한인들은 「조선건국축진청년연맹」을 설립하였는데, 「재일조선인연맹」과 「조선건국축진청년연맹」은 연합군 점령사령부의 지원 아래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 하면서, 체제이념,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즉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 한인사회는 분열 되고 대립하였다.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는 「재일조선인연맹」(조련) ⇨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으로 발전하였고, 한국을 지지하는 단체는 「조선건국축진청년연맹」(건청) ⇨ 「신조선건설동맹」(건동) ⇨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으로 발전하였다.

(1) 해방직후의 재일 한인사회의 사상적 성향과 좌경화

(가) 재일한인의 사상적 지향과 국적 선택

해방직후의 재일 한인사회는, 전쟁에 패한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동기에 있었으므로, 일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¹¹

패전 직후 일본사회는 정치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만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아, 빈곤, 기성 권위의 추락, 가치관의 파괴, 무질서 등에 의한 혼란 상태에 있었다. 즉 일본사회

¹⁰ 1946년 2월 17일 미국 점령군 총사령부(GHQ)가 신고 받은 재일 잔류한국인의 총수는 647,006명이었다.

¹¹ 배정호,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는 사회주의 혁명사상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은 “패전국가 일본”에서 권위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주도적인 사상의 한 조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혁신사상이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적 분위기는 재일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 노동자로 하층생활을 하였던 재일 교포 1세, 2세들은 민족적 입장과 더불어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였고,¹² 정치적으로는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혁신계세력을 지지하는 편이었다.¹³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이와 같은 사회주의 지향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은 한반도의 38선 분단에 따른 국적선택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났다.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본적지를 보면, 경상남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8선 이남지역 출신이 거의 대다수이다. 그런데 국적선택 상황을 보면, 1950년도의 북한국적 취득자는 약 46만7,470명, 한국국적 취득자는 약 7만7,433명이다. 즉 재일교포들 가운데 86%가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절대다수의 재일교포들은 자신들이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고 자신들의 고향 또한 미국의 통치하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적취득 성향은 해방직후 재일 한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이 사회주의 등 혁신지향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울러 재일한인 혁

¹² 심한 차별과 비참한 하층 노동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재일동포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지극히 매력적이며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상이었다. 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1972).

¹³ 일본제국주의 시절, 피압박민족으로서 엄청난 압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대다수의 재일교포 1세, 2세들은 사실 사상적인 입장에 앞서 민족적 차원에서 戰前에 천황제와 침략전쟁, 식민지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했던 일본의 혁신계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감을 가졌고 그들을 지지하였다.

신계 세력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재일 한인자치단체의 좌경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재일한인들은 해방된 민족으로 처우 받고 회복된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내 각지에서 약 300여개의 한인자치단체를 결성했다. 즉 재일한인들은 귀환의 후원, 생활상담 등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300여개의 각종 소규모 자생단체들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재일한인들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지역별 단체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¹⁴ 또 재일한인대표들은 일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을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단체로 결성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10일 도쿄(東京)에 모여 「재일본 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년 10월 15일에는 도쿄의 히바야(日比谷) 공원에서 전국대표 약 5,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통하여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라고 칭함)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련」은 처음에는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이 세력확대를 위하여 공작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이념갈등에 따른 조직적 분열을 거치면서 좌경화되었다. 말하자면, 좌우파를 망라한 재일한인단체 「조련」은 전전(戰前)의 일본공산당 간부였던 김천해가 「조련」에 개입하게 된 이후부터 좌경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45년 10월 10일 도쿠다(德田球一)를 비롯한 일본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출옥한 김천해는 동년 10월 15일 「조련」 결성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대중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조련」의 최고고문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조련」에 최고고문으로서 개입하게 된 김천해는 「조련」의 주도권 장악 및 좌경화를 위하여 「조련」에서 보수적인 민족주의 우파세력들을 축

¹⁴ 예컨대 「關東地方 朝鮮人會」, 「在留 朝鮮人對策懇談會」, 「高麗人 中央協議會」, 「大阪 朝鮮人協議會」 등이 결성되었다.

출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 결과 「조련」은 김천해, 김두용, 박은철 등 일본 공산당 간부를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들에게 장악되고, 「조련」은 일본 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활동거점이 되었다.¹⁵

그리고 일본공산당이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조련」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조련」은 일본공산당과 동일한 이념아래 동일한 과제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하부조직으로 전략되어 갔다.¹⁶

(2) 민단의 결성

(가) 민단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 단체로 출발한 「조련」이 좌파세력들의 세력 확산 공작과 더불어 이념적 분열을 거치면서 좌경화로 기울게 되자, 이에 반발한 홍현기·김삼호 등 우파 민족주의 청년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이하 「건청」이라 약칭함)을 결성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16일 결성된 「건청」은 「조련」과 마찬가지로 연합군 점령사령부(GHQ)의 지원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펼쳤는데, 「조련」과는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 체제이념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¹⁷

또 이강훈·원심창 등 아나키스트계, 민족주의 중도파, 구(舊)친일계 재일한인들은 1945년 10월 27일 정치범으로 23년간 복역한 박렬이 아키다(秋田) 형무소에서 출옥하자 그를 중심으로 1946년 1월 20일 「신조선 건설동맹」(이하 「건동」이라 약칭함)을 결성하였다. 「건청」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건동」은 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¹⁵ 일본共産黨은 「朝聯」을 활동거점으로 黨재건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1945년 12월 제4차 黨大會에서 黨을 부활시키고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¹⁶ 일본共産黨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德田球一서기장의 최측근인 김천해는 黨의 중앙위원, 정치위원, 조선인 부장직을 겸직하게 되었고, 「朝聯」내 韓人좌파 세력들도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一國一黨의 原則”에 따라 일본共産黨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一黨”원칙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外國人의 경우 공산당에 入黨하려면 在留國 공산당의 당원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¹⁷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pp. 79-80.

「건동」은 신탁통치지배를 지지하는 「조련」을 반(反)민족단체로 비판하고,¹⁸ 「건청」과 힘을 합쳐 「조련」에 대항하였다. 즉 「건동」과 「건청」은 ‘신탁통치 반대 대회’를 열어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3·1독립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재일 한인사회의 좌경화를 막기 위하여 우파 민족진영의 방과제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재일한인들의 거주·생활안정 및 권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건동」 및 「건청」은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건동」은 ‘조선과 일본의 융화, 조선의 완전독립’을 표방하고 처음부터 정치단체로 발족하여 활동범위를 스스로 제한하였으므로 사회단체인 「조련」에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하였다.

그러므로 재일 한인사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한인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946년 8월 31일 개최된 「건동」 제2회 전체 대회에서는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거류민단결성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동년 9월 28일 개최된 「건동」·「건청」의 전국대의원 합동대회에서는 「민단」창설에 관한 제원칙이 합의되었으며, 동년 10월 3일에는 「재일조선거류민단」의 결성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재일조선거류민단」 도쿄 결성대회에는 「건청」·「건동」뿐만 아니라 「건국축진회」, 「조선구락부」, 「조선거류민회」, 「대한협회」, 「조선무역협회」, 「조선문화협회」 등 유명무실한 단체를 포함하여 20여개 단체의 대표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하였고, 「민단 제 1차 선언」¹⁹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도쿄 결성대회이후, 「재일조선거류민단」은 전국조직을 지향하여 각 현(縣)에 지방분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10월 4-5일 전국대회를 소집하여 「민단 제2차 선언」²⁰과 더불어 조직명을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으로

¹⁸ 「建同」은 『신조선』 창간호와 제2호, 제3호를 통하여 격한 논조로 신탁통치반대를 주장했다.

¹⁹ 「민단 제1차 선언」의 3대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재일동포의 민생안정을 기함.
2. 우리는 재일동포의 교양향상을 기함.
3. 우리는 국제친선을 기함.

약칭함)으로 개칭하였다.

(나) 역경속의 민단의 성장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이 혁신계 단체를 지지하는 성향 때문에 조직적 열세에 있었지만, 재일한인들의 인권 및 생활권을 위하여 「사법육성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외국인 등록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조련」 및 그 산하의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의 극좌 폭력노선에 따른 테러의 감행 속에서도 조직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였다.

① 「사법육성회」의 창설과 「협동조합」의 결성

연합군 사령부는 1946년 11월 20일 기본지령을 통하여 “본국 귀환을 거절하고 일본에 재류(在留)하는 조선인은 일본법률에 따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재일한인들은 일본법률에 무지하였으므로 인권 및 생활권에서 침해당하기 일수였고, 또 자신들을 보호·구원하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인권 및 생활권에서 침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인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사법적 보호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1947년 3월 31일 「재일조선거류민단사법육성회」를 설립하게 되었다.²¹ 「재일조선거류민단사법육성회」의 설립과 더불어 민단은 일본법률에 무지한 재일한인들이 인권 및 재산권

²⁰ 「민단 제2차 선언」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함.
2. 우리는 재류동포의 민권옹호를 도모함.
3. 우리는 재류동포의 민생안정을 도모함.
4. 우리는 재류동포의 문화향상을 도모함.
5. 우리는 국제친선을 도모함.

²¹ 회 장 : 박열

부회장 : 이강훈, 심원창

이사장 : 김종재

이 사 : 권일, 김보경, 김정주, 서상한, 현희, 정철, 김재화, 정주화, 최유준, 왕시복, 김희명, 서충희

의 억울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 민단은 전후 일본사회의 하층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일한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검토·연구하였다. 마침내 민단은 1947년 4월 15일 재일한인들의 생활합리화를 지도하고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²²

민단은 「재일본조선거류민단협동조합」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재일한인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재일본조선거류민단협동조합」을 민단사업의 조직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② 외국인 등록과 민단의 투쟁

연합군 사령부가 1946년 2월 17일 「외국인등록」에 관한 취지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1947년 5월 2일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적용되는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칙령 제270호 및 내무성령 제28호로서 외국인등록령 및 동 시행규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일외국인의 등록 조치는 재일한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포츠담 선언에 입각하여 ‘독립국민’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는 개념상의 규정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재일한인들은 해방된 민족이었지만, 조국이 아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미국의 군정치하에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국적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일한인들은 일본국 및 일본인들로부터 ‘비(非)일본인’ 또는 ‘제3국민’이라 하여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기형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아야만 했다.

²² 조 합 장 : 원심창
부조합장 : 김희명, 서충신
상무이사 : 김희명, 현희
이 사 : 김정주, 정주화, 정동조
감 사 : 전두수, 변영우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재일한인들은 일본정부의 외국인 등록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조국이 독립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당분간 외국인으로 정당한 대우를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단은 「외국인등록령」 공포 직후 즉시 부당한 외국인등록령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표명하고, 이어 동년 6월 16일 올바른 국제법에 근거한 외국인 대우를 주장하는 「민단의 견해」²³와 「박열단장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민단은 동년 7월 25일 연합군사령부에 대하여 청원서와 민단의 결의를 전달하고, 8월 20일에는 ‘외국인 등록에 대한 불협력’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민단 투쟁활동은 일본당국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일본당국은 민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외국인 등록을 민단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947년 12월의 제 4회 민단 중앙협의회 결의 즉 모든 등록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외국인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 결의는 재일한인들의 법적 문제를 본격적인 문제로 격상시킨 발전적인 결의이기도 하다.

③ 민단의 시련과 성장

1949년에 접어들면서 일본공산당은 소련의 스탈린과 코민포름의 지령에 따라 평화적인 의회전략에서 폭력적인 극좌투쟁노선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일본공산당과 활동방침을 같이 하였던 「조련」²⁴은 국제공산주의

²³ 민단의 일본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1. 국제 통념에 입각한 올바른 외국인 등록령을 요구한다.
2. 조선인의 등록은 조선인 단체에 일임하고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3. 일본정부는 조선인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
4.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생명·재산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5. 세계평화를 위해 조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본 국민들이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²⁴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자 「朝聯」은 즉시 북한의 정부수립 강령을 지지하였다.

노선 및 극좌투쟁 노선을 추종하면서 “조선의 통일과 독립”, “일본의 민주혁명 달성” 등을 표방한 많은 불법 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조련」의 불법 폭력행위는 민단간부들에 대한 테러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1949년 7월 14일에 민단의 宮城縣 지방본부 단장이 조련계 조직원에 의해 사살되었고, 동년 8월 20일에는 아마구치현(山口縣) 지방본부가 「조련」과 「재일조선청년동맹」의 조직원들에 의해 1주일간이나 습격당하였다. 이와 같은 조련계의 테러·폭력행위는 좌익계 단체는 물론 재일 한인 사회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⁵

1949년 9월 연합군 총사령부와 일본 법무성은 「조련」을 폭력단체로 규정하여 「단체 등에 관한 규정령」 제4조에 의거 해산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련」 및 그 산하의 전위적 행동부대인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은 물론 조련계 학교가 폐쇄되고, 그 여파로 민단계 학교까지 폐쇄를 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 당국이 폭력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분아래 재일 한인사회 전체를 좌익시하고 때때로 문제 삼음에 따라 재일한인들은 억울하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다.

민단은 이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조직의 확대·강화를 도모하여 1949년 10월경에는 지방본부 조직 43개소, 지부조직 207개소, 분단(分團)세력 133개소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민단은 즉각 「재일 의용 학도군」을 조직하여 참전하였고, 현금 932,712원(圓), 위문포대 2,825자루를 본국에 보냈다.

요컨대, 좌익세력의 테러, 재일 한인사회의 압도적인 북한지지,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민단은 조직을 정비하고 성장을 추구한 것이다.

²⁵ 필자가 만난 일본인들 가운데 이 당시에 청년기를 보낸 일본인들은 朝聯계의 폭동을 생생히 기억하였다. 朝聯계의 폭동은 일본인들의 재일한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한 사건이었다.

(3) 조총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좌익단체로 변모한 「조련」이 폭력적인 극좌노선을 추구하다가 1949년 9월 8일 강제해산을 당함에 따라,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조련」의 산하단체였던 「조선해방구원회」와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을 통하여 「조련」의 구(舊)조직을 재건코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해방구원회」와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광범한 조직이었던 「조련」의 구(舊)조직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조련」의 구(舊)간부들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조련」을 대체할 수 있고, 이강훈을 중심으로 한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형성’ 제창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하여야 했다.

따라서 「조련」의 지하 간부들은 1950년 4월 24일 「조선인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산하에 「조선해방구원회」,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조선인학생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을 망라시켰다.

이와 같은 「조련」 구(舊) 간부들의 조직재건 움직임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기간조직을 지하화하였던 일본공산당에게도 당의 태세를 긴급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즉, 일본공산당은 당의 「조선인부」를 검토하여 「민족대표부」로 재출발시키고, 나아가 「민족대표부」로 하여금 1950년 7월 「조국방위위원회」의 결성과 더불어 재일 조선청년의 결집을 위한 「조국방위대」라는 서클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부터 조국통일 활동에 동참을 요청받았던 「조련」의 구(舊) 간부들은 「조선인단체협의회」로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일교포사회에서의 조직재건 및 확대를 위하여 1950년 6월 16일 「재일조선민주민족전선 결성 준비회」를 발족시켰다.

「재일조선민주민족전선 결성 준비회」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즉시 「재일조선통일 민주전선 준비회」로 개칭되었다가 다음해인 1951년 1월 9일에 이르러 전국적 조직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이하 「민전」이라 약칭함)으로 정식 발족되었다.²⁶ 한국전쟁의 영향 속에서 결성된 「민전」은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의 결집체로서 기반을 공고히 해갔다.

1953년 11월 11일 「민족대표부」의 주도아래 개최된 제4차 「민전」 전국대회 이후부터 중앙간부의 다수가 일본공산당의 당원이 됨에 따라²⁷ 「민전」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는 「조련」때보다 더욱 긴밀해졌고, 아울러 「민전」은 일본공산당의 혁명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련」이 해산된 후,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일본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²⁸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조국방위위원회」 및 「민전」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일본공산당이 「민전」이 결성 된지 1개월 후인 1951년 2월에 개최된 제4차 전국협의회에서 무력투쟁을 행동방침으로 결정하자 「민전」은 합법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였고, 「조국방위위원회」는 비합법적인 군사혁명노선에 따라 투쟁을 전개 하였던 것이다.

²⁶ 「民戰」의 결성이 지연된 것은 한국전쟁의 戰況과 관계가 있다. 즉 「朝聯」계 인사들은 1950년 9월 14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轉機로 戰況이 북한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11월 25일 中共軍의 개입으로 戰勢가 다시 북한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勢확대를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발족시킨 것이다.

²⁷ 「民戰」시기까지만 해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 一黨의 원칙”이 엄존하였으므로, 재일 韓人공산주의자들이 共產黨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共產黨에 당원으로 가입하여야 했다.

²⁸ 일본 패전 후, 「朝聯」은 일본공산당과는 黨 재건 때부터 一心同體로 활동을 해왔는데 일본당국은 「朝聯」과 일본共產黨의 해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朝聯」에 대해서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일본당국은 「朝聯」에 대해서 해산 및 재산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 비하여 일본共產黨에 대해서는 중앙간부들의 공직에서의 추방, 당 기관지 『赤旗』의 무기한 발행정지, 점령군 충사령부의 “레드 퍼지(red purge)”지령에 따른 신문·방송·통신 분야 등에서의 공산당계 인사 약 14,200명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朝聯」의 간부들은 일본 당국에 대해서 민족차별에 따른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共產黨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즉 「朝聯」의 舊幹部들은 일본共產黨으로 부터 이탈된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민전」 및 「조국방위위원회」의 활동은 격렬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격한 투쟁은 (1) 대외적으로 이전의 「조련」계의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일본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고립화를 초래하였고, (2) 대내적으로 일본 공산당원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치름에 따라 조직의 약체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민전」의 내부에서는 일본공산당의 극좌 폭력노선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일본공산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되었다.

여기서 「민전」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일본공산당 대신에 북한으로의 경사를 의미하는데,²⁹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민전」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확대되어져 갔다. 북한은 국제환경에서의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³⁰와 일본에서의 대 공산권 유화적 정권의 등장으로³¹ 대일본 접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³²됨에 따라 일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아울러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영향력증대를 위하여 「민전」으로 하여금 일본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지도노선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파가 「민전」의 주류인 「민족대표부」파에 대하여 정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제19차 「민전」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민족주의파가 대세를 장악함과 더불어 「민전」의 활동은 사실상 북한의 주도아래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5년 5월 24일 북한의 지원 아래 치루어진 제6차 「민전」 전체대회를 통하여 「민전」과 「조방위」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동년 5월 25일 「재일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이라고 약칭함)는 결성되었다.

²⁹ 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pp. 47-48.

³⁰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평화공존 노선을 주창하였는데 그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³¹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은 대미의존정책으로 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³² 배정호,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남북관계,”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第5卷 (統一院, 1994), pp. 133-213.

「조총련」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공산당출신의 「민전」간부들은 당적을 이탈하였고, 대부분의 「민전」간부들은 「조총련」의 주요직책을 맡았다.

「조총련」의 결성배경 및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³³

첫째, 국제환경 및 일본 국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여 평화공존노선을 주창함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또 (2)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은 대미 의존정책으로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대 일본정책을 유화·접근정책으로 전환토록 하였다.³⁴

둘째, 「민전」의 내부에서는 일본공산당의 극좌노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일본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는데, 북한의 대일본 유화적 접근은 그와 같은 「민족주의」파가 「민

³³ 위의 논문.

³⁴ 북한의 南日외무상은 1954년 8월 30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에게 대한 일본정부의 비법적 박해를 반대 항의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재일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정책차원에서 보호할 것임을 천명한 것에 이어 1955년 2월 25일 대일 관계에 관한 성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북한정부는 남일외무상의 성명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면서도 일본정부와 무역, 문화관계 및 관계정상화를 향한 북한·일본 관계의 발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의사 표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 1956), p. 16.

“조선 인민은 과거에 조선을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제패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본을 재무장하여 일본에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책원지로 전변시키며 일본 인민을 새로운 군사적 모험에 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선 호상 이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련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 수상 하토야마씨의 우리 공화국과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며 회담할 용의를 표명한 최근 발언을 긍정적으로 대하며 따라서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기타 조일관계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진」 및 재일 한인사회에서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지원세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민전」의 지도노선이 일본공산당에서 북한노동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총련」이 결성되었는데, 북한과 「민족주의」파의 주도아래 「조총련」이 출범하였다는 것은 해방후 재일 한인사회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규제해 왔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원칙인 “일국일당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일 한인좌파 세력들은 해방후 일본공산당과 10년간에 걸쳐 형성된 인적·조직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대일본정책 및 재일교포정책이 부재하였던 시기에 북한이 대일본 유화적 접근 및 재일교포 포용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재일교포사회의 좌경화를 가속화하였고, 아울러 일본 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실제로 일본 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은 「조총련」의 조직적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해외전위조직을 확보한 것이다.

조총련은 북한노동당의 지도노선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³⁵ 따라서 조총련은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가 지방조직을 통괄하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즉 중앙조직은 중앙대회(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지방조직은 일본의 행정구역에 준해서 도(都)·도(道)·부(府)·현(縣) 본부 49개소, 지부 320개소, 분회 2,000개소와 7개 지방협의회로 구성되었다.

³⁵ 조총련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은 中央常任委員會의 議長에 의하여 주관되었다. 말하자면, 조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인 한덕수의 지휘아래 한덕수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8,500명의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조총련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1957년 3월 결성된 ‘學習組’는 비밀조직으로서 ‘김일성주의’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고 ‘조국혁명=조국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는 핵심적인 ‘혁명투사’조직이다. ‘學習組’는 북한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조총련은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 성별 활동과 여론주도를 위한 선전·홍보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여러 단체들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산하단체>

재일조선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재일조선인교육회, 재일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조선유학생동맹,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재일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조선인체육연합회, 재일조선인불교도연맹, 재일조선인통일동지회

<주요 사업단체>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재일조선인통신교육협회, 재일수출입상사,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조총련중앙학원

2.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1955년 북한의 지원 아래 재일 한인사회의 좌파세력을 재결집하여 등장한 조총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민단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복송사업 등을 전개하여 재정과 조직 면에서 민단보다도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나아가 조총련은 일본 정계와의 관계도 공산당의 범주를 넘어 그 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내부권력의 후유증, 재정적 기반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조총련계 지식인의 반발, 북한 지상낙원론의 붕괴 등과 더불어 민단이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반면,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의 생활보수화 성향, 1990년대 이후의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정치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의 붕괴, 재일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현재 조총련은 물론 민단까지도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재일한인 2·3·4세대의 민족의식 약화는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가. 민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1) 민단의 주요활동과 발전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의 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발전하였다.

(가)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에서 제의한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와 민단은 1975년 4월부터 조총련계 교포의 성묘 방한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정부와 민단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재일조총련계 한인 포용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5년 추석, 북한을 지지하고 한국정부를 적대시하였던 조총련계 한인 1,000여명은 30년 만에 한국의 고향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성묘를 하고 친지들을 만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1년 동안에 약 1만 명 이상의 조총련계 교포가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형제와 재회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일본의 TV,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되

었다. 그와 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 덕택으로 민단의 성묘단 사업은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성묘단사업은 연말연시, 한식, 단오절 방문단으로 계속 확대·발전되어 갔다.

한편 성묘단에 참가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조총련계 한인들은 북한과 조총련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정치적, 사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총련계 한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환멸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성묘단으로 한국을 다녀온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총련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고, 또 조총련의 조직과 인적·경제적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탈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조직의 활동에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³⁶ 즉 한국 정부와 민단의 성묘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조총련의 구심력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조직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재일조총련계 한인들의 모국성묘단 사업’은 재일 한인사회에서 민단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반면, 조총련계 한인사회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조총련 조직을 근거에서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나) 한국정부와 민단의 교육사업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1949년 오사카(大阪)에 백두학원과 금강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재일교포의 민족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단의 교육사업은 조총련에 비하여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단계 재일한인들은 민족교육을 위하여 백두학원이나 금강학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일본정부가 재일한인들에 대한 교육정책으로 공립소·중학교내에 설치한 ‘민족학급’을 이용하여야 했다. ‘민족학급’은 일본

³⁶ 성묘단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총련계의 한 교포는 ‘조총련 조직에 대한 반감과 민단가입을 주저해야 하는 심정’을 익명으로 1977년 12월 21일자 통일일보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조선인학교 폐쇄령’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1949년 12월부터 도쿄도(東京都),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縣), 아이치현(愛知縣) 등의 공립 소·중학교에 한국·조선인 재학생들을 위해 설치한 ‘한국어 과외수업 교실’이다. ‘민족학급’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고, 각급교육위원회가 감독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학급’의 교육은 점차로 쇠퇴하다가, 1970년대 이후 일본학교들이 재일한국인 민족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에 적지 않게 기여하게 되었다.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에 관한 한국정부의 관심은 196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1961년 2월 「문교부 교포교육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재일한인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동년 12월에는 주일한국대표부 내에 장학관실을 설치함과 더불어 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 등지의 전일제(全日制) 한국학교와 홋카이도(北海道) 등지의 야간 한국학원에 교사들을 배치하였다. 즉, 1945년 8·15해방이후 처음으로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교사들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민단은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1962년부터 본국유학 희망자들을 위하여 ‘모국 수학제도’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1963년 4월에 일본 주요도시 10개 처에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했으며, 1966년부터는 하계학교(고교생·대학생 대상), 1977년부터는 춘계학교(대학생 대상)와 하계학교(중·고교생 대상)를 개설하였다.

요컨대 민단의 교육사업은 비록 규모면에서 조총련계 학교보다 상당히 열세에 있었지만, 한국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아래 ‘모국이해교육’ 및 ‘현지적응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다) 권익신장운동

1970년대까지만 일본사회는 모든 사회복지제도에 국적조항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일한인들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민단은 제27회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재일한인들의 「인권선언」을 채택함과 동시에 「재일한국인 권익옹호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행정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다. 「차별철폐 100일간 운동」기간(1997. 8.1-11.8)동안에 각 지방조직은 지방자치제에 「차별철폐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아가 자치제의 결의 채택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재일한국인 권익옹호위원회」는 행정차별 철폐의 당면중점목표로서 (1) 주택입주 차별 (2) 아동 수당·국민연금의 적용 (3) 주택 공고(公庫) 등의 용자 (4) 공무원 채용의 네 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이에 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망서를 작성하였고, 아울러 차별의 실태를 이론적으로 고발하는 「차별백서」 7권을 발간하여 일본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일본정부 및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요망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단의 노력으로 마침내 1980년에 ‘주택입주 차별’ 및 ‘금융공고(公庫) 차별’은 일단 해소되었다. 그 외 사법연수생, 아동수당, 교원채용, 지방공무원, 소학교 취학안내 등에서 차별이 철폐되었다. 또 1981년에 최대의 난관이었던 ‘국민연금’ 문제에서 국적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복지제도에서의 국적차별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그리고 민단은 「민단연금」제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재일한인들의 복지를 위한 보험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각종 신용조합을 결성하여 재일한인들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1983년 가을에 들어오면서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기본적 인권침해인 지문압날제도(指紋押捺制度)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37만 명이 라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1985년에 접어들면서 민단은 이 해의 3·1절 기념행사를 「지문압날·상시연대제도(指紋押捺·常時携帶制度) 철폐 요구대회」로서 개최하였고, 또 일본 법무성이 동년 5월 14일 「지문에 대한 政令」³⁷을 발표하자 즉시 민단은 ‘전국 지방단체장

³⁷ (1) 지문압날을 종래의 회전지문에서 평면지문으로 전환, (2) 지문거부자에게 3

회의'를 개최하고 '지문유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지문유보'운동에는 1만 명 이상의 재일한인들이 참가하였다. 민단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재일 한인사회에서의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조직을 확장시키면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2) 민단의 약화와 민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재일한인 1세대들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강한 민족의식을 지녔지만,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보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³⁸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이제 겨우 7%정도에 불과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 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민단계 청장년 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서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단계 3·4세 젊은 한인들의 취약한 민족의식은 일본 국내외의 탈 이념화 성향 및 국제화 추세에 영향을 받아 한층 약해지고 있고, 이는 민단에 대한 무관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단계 젊은 세대들이 민단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소극적 참여 또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민단은 조직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조직기반의 침체에 따른 조직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민단계 상공인들 가운데는 상당한 재력가들이 있지만, 민단계 민족

개월의 설득기간을 마련, (3) 기간 경과후 자치제는 지문거부자를 교발.

³⁸ 조총련계 교포들이 민단계 교포들에 비해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민단계 교포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하여, 조총련계 교포들은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학교는 재정난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³⁹ 이는 민족 교육의 침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재일한인 3·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는 1990년대 중반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는 1993년 재일 한국인 청년들의 의식 및 가치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4년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 식조사 중간보고서』⁴⁰를 발표하였는데, 최종보고서는 1997년 『재일한국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⁴¹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재일한국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은 ‘부정적 자기이미지 vs. 민족적 긍지’, ‘귀화 희망 vs. 국적 보유’, ‘통명 vs. 본명’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재일청년들의 민족의식 상태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정적 자기이미지 vs. 민족적 긍지’

1980년대 후반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인 자기자신’에 대하여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고 아울러 ‘자신의 부모가 일본인이 아닌 것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부정적 자기 이미지’는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약 63.7%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인에 의한 차별과 그에 따른 민족적 열등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 청년들은 그다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이라는 것에 구애되지 않으려 하고 있다.

³⁹ 오사카 민족학교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김중권 이사장은 예외적인 독지가이다.

⁴⁰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第3次 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查中間報告書』(東京: 在日韓國人青年會 中央本部, 1994年 2月).

⁴¹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나) '귀화 희망 vs. 국적 보유'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재일한국인들의 누계는 18만 7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꼭 귀화하고 싶다'(12.0%)와 '가능한 한 귀화하고자 한다'(15.0%)를 합쳐서 귀화 희망자는 27.0%이고, 한국적 보유에 민족적 의미를 느끼는 자가 '그다지 귀화하고 싶지 않다'(15.9%)와 '절대로 귀화하고 싶지 않다'(27.7%)를 합쳐서 43.6%이다. 그리고 국적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쪽이든 좋다'는 자(者)가 29.4%이다.

따라서 계기가 주어지면, 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56.4%인 것이다. 현재는 2·3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4세 이후에는 상당수가 귀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 '통명 vs. 본명'

재일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본명(한국명)이 아닌 통명(일본명)을 사용하고 있다. 어릴 때는 일본인들 앞에서 본명을 사용하더라도, 중학·고교단계에 들어가면 일본인들 앞에서 거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3차 재일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재일한국인 청년들의 경우 통명을 사용하는 자가 약 80%정도이고, 본명을 사용하는 자는 불과 12%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조국과의 정신적 거리의 확대', '민족적 열등감', '민족일원으로서의 자기부정' 등으로 인하여 민단은 조직유지에서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민단의 어려움은 북한붕괴론의 대두와 함께 한층 가중되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되면 이어서 조총련도 와해되고, 따라서 조총련의 상대인 민단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인식이 김영삼 정부의 재일교포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

하는 햇볕정책이 전개되면서 민단무용론은 약화되었고,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나. 조총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1) 조총련의 주요활동과 발전

조총련은 1957년에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재일 한인사회의 세(勢) 확대를 위하여 (1) 조국의 평화통일 (2) 민족권리의 옹호 (3) 민족교육의 추진 (4) 북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정치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총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가) 조총련의 평화통일운동과 문화선전활동

한반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이승만정부는 무력복진통일을 주창하였고, 이에 비하여 한국전쟁을 도발하였던 북한은 ‘남한의 북침’을 강조하면서 자기합리화를 위한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에 ‘남한은 가해자’이고 ‘북한은 피해자’라는 선전을 펼치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조총련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남한의 북침론을 대대적으로 정치선전을 하면서, 이승만정부의 ‘무력복진통일’에 맞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제도적 정치권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평화주의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⁴² 그와 같은 일본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편승한 북한의 평화통일론은 일본사회에서

⁴² 당시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분위기를 보면,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정치세력들은 ‘헌법개정반대, 평화헌법수호’, ‘미일안보조약반대’, ‘비동맹 중립주의’, ‘재군비 반대’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사회에서 평화주의노선으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이승만정부의 철저한 반일정책노선이 기여한 점도 있다. 이승만정부는 반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들을 나포하고 억류하였는데, 일본국민들은 그와 같은 이승만정부를 호전적으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이승만정부의 북진무력통일론보다 북한의 평화통일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반응은 재일교포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대체로 재일교포사회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므로 무력통일에 대해서는 反통일정책으로 간주하고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⁴³

요컨대 북한과 조총련은 평화통일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재일교포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지지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평화에호적이며 민족주의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조직을 확대·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발판으로 조총련이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勢)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적지 않게 기인한다. 조총련은 조선신보사를 언론·출판 선전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그밖에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시대사, 학우서방, 조선화보사 등을 통하여 북한과 조총련의 노선 및 입장을 홍보하는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였다.⁴⁴

또 조총련은 예술활동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북한과 조총

⁴³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재일교포사회는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이승만정부의 북진 무력통일론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의 차원이 아닌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였고 민족평화통일론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⁴⁴ 조총련계 단체에서 발간하는 주요 기관지는 『朝鮮新報』(日刊, 韓國語), 『朝鮮新報』(週刊, 日本語), 『總聯週刊』(韓國語), 『祖國』(日刊, 韓國語), 『朝鮮通信』(日刊, 日本語), 『朝鮮英文通信』(日刊), 『朝鮮書報』(月刊, 日本語), 『朝鮮青年』(週刊, 韓國語), 『朝鮮青年』(月刊, 日本語), 『朝鮮女性』(月刊, 韓國語), 『朝鮮商工時報』(週刊, 日本語), 『文藝學術』(月刊, 韓國語), 『朝鮮大學新聞』(日刊, 韓國語), 『朝鮮大學新聞』(月刊, 日本語), 『친한동무』(旬刊), 『세세데』(月刊, 日本語), 『朝鮮資料』(月刊, 日本語), People's Korea(週刊)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朝鮮新報』(日刊, 韓國語)이다.

련을 홍보하는 영화상영은 물론, 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금강산가극단 등을 전국 순회공연 시켰다. 즉 재일교포들의 민족적 정서와 타국살이의 애환을 달래주면서 북한과 조총련의 정책노선을 홍보하고 아울러 그 지지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이다. 재일교포들의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이데올로기를 넘어 교포사회에 널리 침투(浸透)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총련의 선전활동은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 대하여 조총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총련의 선전조직은 대체로 1960년대 전반(前半)에 걸쳐 대대적으로 확대·발전된다. 즉 뒤에서 곧 언급할 ‘재일교포 복송사업’을 통하여 조총련의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이 비약적으로 증대될 때 확대된 것이다.

(나) 조총련의 교육사업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방된 재일교포들은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국어강습소」를 세우고 여기에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자녀들을 입학시켜 한글을 비롯한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련」의 등장과 더불어 설립된 「국어강습소」는 1946년 봄부터 재정비되어 초등교육전반에 걸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들의 교육열은 재일교포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교포사회에서 조직의 확대 및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의식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대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조총련의 결성과 더불어 재일교포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재일교포의 민족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조총련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교육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즉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했던 1957년 4월에 북한은 1억2,100만엔(61만5천5백80달러)의 교육자금을 조총련에게 지원하였다.⁴⁵

⁴⁵ 1957년 한국정부는 재일교포를 위한 교육지원 자금으로 22,000달러를 지원하였

그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매년 ‘신년 축하’, ‘김일성 생일’, ‘북한정권 수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등에 학교운영비 및 장학금의 명목으로 조총련의 교육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은 교육지원자금과 병행해서 교육활동가에게 훈장, 메달, 공훈 교원, 인민교원 등의 명예칭호를 부여하고 아울러 박사, 교수, 준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까지 수여하면서 조총련의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⁴⁶

조총련은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전역에 유치원부터 고급까지 설립하고 대학까지 세웠다.⁴⁷ 나아가, 조총련은 북한의 교육노선에 입각하여 한편에서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사상 교육을 시켰다. 조총련의 공산주의사상 교육은 1958년 8월경부터 재일교포의 복송운동이 추진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⁴⁸

이와 같이 일본의 여러 지역에 유치원부터 고급학교까지 설립하고 대학까지 세웠다는 것은 조총련의 커다란 업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한지지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태생의 한인 2세, 3세들을 위하여 한글교육과 역사,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조총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업적이다.⁴⁹ 조총련계 한인들뿐만 아니라 민단계 한인들의 자녀들도 적지 않게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다녔다.⁵⁰

는데, 이는 북한의 1/28에 지나지 않는다.

⁴⁶ イム・チョンスク, 『在日僑胞たちの法的地位』(ピョンヤン, 1990), p. 163; 安夢弼, “日本の在日朝鮮人政策と日本,” 『美蘇研究』, 第7輯(1994)에서 재인용.

⁴⁷ 현재 조총련은 일본의 47개 都道府縣 가운데 27개 지역에 67개의 유치원, 83개의 초급학교, 56개의 중급학교, 12개의 고급학교, 1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외교포조직이 세운 유일한 대학인 朝鮮大學은 1956년 4월에 2년제 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북한의 재정적 지원 아래 1958년 3월부터 4년제 대학으로 성장하였고 1968년 4월에는 사회당출신의 美濃部 東京都지사로부터 ‘各種學校’로 인가를 받았다. 조선대학의 인가를 전후하여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총련의 각급학교들도 속속 인가를 받았다.

⁴⁸ 李瑜煥, 『재일한국인60만』(東京: 洋洋社, 1971), pp. 225-228.

⁴⁹ 재일한인 좌익계 세력과 조총련계의 교육사업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면도 있었지만 민단계가 할 수 없었던 업적을 남겼다. 허동찬, “조총련 교육,”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⁵⁰ 재일교포사회에서는 “머느리는 우리글과 우리풍습을 아는 조총련계 출신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는 여담도 있다.

그러므로 조총련은 재일한인들의 결집의 장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민족학교를 조직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민족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광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케 하여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⁵¹ 사실 조총련계 학교의 사상교육은 조직 구성원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하여 조직의 확대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 졸업생들의 사상적 성향은 대체로 일본자본주의체제의 틀 내에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적으로는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요컨대 북한의 막대한 교육자금지원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밑거름이 되었고 아울러 조총련의 조직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다) 조총련의 금융사업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재일한인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특히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재일한인들은 토목공사장의 인부, 구두·고무타이어·냄비 등의 수리공으로 일하거나 영세한 ‘곱창구이집’, ‘국수·수제비집’, 판매업 등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였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편찬한 「출입국관리와 그 실태」(『出入國管理とその實態』, 1959)를 보면, 약 60여만 명의 재일교포 가운데 무직자가 45만9천여명정도이다.

또 ‘맨주먹’으로 상공업을 시작한 재일교포들은 일본정부의 규제, 차별에 의한 어려움은 물론,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무척 고생을 하여야 했다. 일본은행들은 일본기업들도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이 ‘재일교포들은 귀국해버리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⁵¹ 지금까지 조선대학 졸업생이 1만 명이다. 재일교포가 70만 명이므로 교포 70명 중 1명이 조선대학 졸업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졸업생들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는 재일교포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 졸업생은 조총련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없게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따라서 재일교포들은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고 상공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일본당국은 민단계와 「조련」계 공동운동을 조건으로 동화신용조합(同和信用組合)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1952년 6월 20일 동화신용조합이 운영되면서 코오베(神戸), 가와사키(川崎),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등 8군데에 민족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10군데, 1962년에는 19군데가 세워졌다.

그런데 동화신용조합은 민단계와 조총련계간의 갈등으로 내분을 겪다가 1961년 5월 제 9차 총회에서 조총련의 가맹을 결정함에 따라 조총련계 기관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명칭도 조은 도쿄 신용조합(朝銀 東京信用組合)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을 일본 각지에 지점으로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송금되어 오는 교육사업 지원금 및 장학금을 조은신용조합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조총련계 금융조합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조선신용조합은 조총련의 결성당시에는 8군데의 신용조합, 14개의 점포, 8억8천만엔의 예금액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 6월경에 이르러서는 38군데의 신용조합, 176개의 점포, 2조375억엔의 예금액 규모로 성장하였다.

조총련계 한인뿐만 아니라 민단계 한인들도 조총련계 금융조합을 이용하였으므로, 조총련계 금융조합은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민족차별과 불리한 대부조건에 고생하던 재일한인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²

⁵² 현재 조총련계 상공인은 약 2만2천여 명 정도인데 이들은 빠칭꼬, 부동산업, 불고기집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4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朝銀信用組合을 비롯한 조총련계의 금융조합은 이들의 사업이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조총련의 재일한인 복송사업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일본정부에 ‘재일한인들의 복송’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조총련도 1958년 8월 12일 도쿄에서 열린 8·15해방 13주년 기념대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선전요청문을 통하여 “재일본 조선인의 북조선귀국을 보장하여 조속히 그것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망 한다”고 공식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 8일 김일성은 북한정권 창건 10주년 기념대회에서 “무권리와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가 조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보증해 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족적 의무로 생각한다.”고 연설하면서 조총련의 ‘재일한인 복송운동’을 격려했다. 또 동년 9월 16일 북한의 남일 외교부장은 “최근, 재일조선공민은 자기들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귀국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염원을 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공화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공민들은 실업과 무권리에 의하여 극도로 비참한 생활 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향유치 못하고 있으며, 진학과 졸업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 못 받고 있다. ----- 우리들은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에 귀국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조선공민을 우리 측에 인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 한다”며 한층 박차를 가했다.⁵³

이와 같은 북한 측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정부는 1959년 2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희망하는 재일한인들에 한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 간에는 1959년 4월 13일부터 제네바에서 17차에 걸친 교섭회의를 하게 되고, 마침내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일본 적십자대표와 북한 적십자대표 간에 재일한인들의 복송협정을 체결

⁵³ 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pp. 59-60.

하게 되었다. 재일한인들의 북송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총련의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일본정부의 보조아래 추진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제 1차 재일교포의 북송이 실시된 이래, 1967년 11월 12일 북송협정이 폐기 될 때까지 155차례에 걸쳐 총 88,611명의 한인들이 니카타(新潟)항구를 통하여 북한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⁵⁴ 조총련계 한인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 속에 서럽게 살고 있는 재일한인들을 구출해 주는 민족주의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재일한인들이 155차례에 걸쳐 88,611명이나 북한으로 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총련계 한인들은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총련의 북송사업이 그렇게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호응을 받으며 전개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일한인 1세·2세대는 일본에 정착하기보다는 조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사회에서는 재일한인들을 한 반도로 돌려보내라는 여론이 있었다.

둘째,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회가 못 되었고 더욱이 당시의 재일한인들은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취직도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셋째, 재일한인들은 소박한 민족감정에서 남의 나라 일본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조국의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⁵⁴ 재일교포의 북송사업에 관련된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북한은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겪고 있었으므로 노동 공급전략의 일환으로 북송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북한은 동포에 차원에서 북송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재일교포사회에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일교포사회 전체를 적화시킨다. 셋째, 한국이 재일교포의 북송반대를 반대할 경우, 이를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 데 이용한다. 넷째,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당시의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한인들을 받아들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⁵⁵

다섯째, 재일한인들은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었으므로 조총련과 일본의 혁신계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지상낙원론’ 선전에 현혹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막대한 교육 원조비 및 장학금은 재일한인들이 그와 같은 환상을 갖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재일한인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조총련의 북송사업에 적극 호응토록 한 것이다.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은 1966년 8월 북송협정의 폐기와 더불어 일시 중지 되었지만, 1971년 2월 북송재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속 추진되었다.⁵⁶

이와 같이 재일한인들의 호응 속에 전개된 조총련의 북송사업은 조총련의 재정기반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조총련은 북송한인들에게 (1) ‘지상낙원’ 북한에 가면 모든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였고, 나아가 (2) 조총련에 돈이나 집 등 재산을 기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반대급부로 우대를 받는다는 선전을 하였다. 즉 북한은 북송한인들의 재산기부를 유도하는 선전공세를 펼친 것이다.

그 결과, 북송한인들의 상당한 재산이 조총련에 기증되었다. 이로써 조총련의 재정적 기반은 북송한인들의 재산기증, 조총련계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강화 등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총련은 민족교육사업,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을 계기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와 같이 조직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대한 조총련은 일본의 좌파세력과의 관계에서도 그 폭을 넓혀 나갔다.⁵⁷

⁵⁵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이 시작된 4개월 후 한국에서는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정권이 붕괴하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정국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게다가 ‘보리 고개’ 등 경제적으로는 절대빈곤상태에 있었다.

⁵⁶ 1996년 현재 북송교포는 93,33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⁵⁷ 조총련은 1950년대까지는 주로 일본공산당과 직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변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북한과 조총련은 일본

(2) 조총련의 쇠락과 조총련계 재일 한인사회의 실태

(가) 조총련의 몰락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3·4세의 젊은 세대들은 혁신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교육사업 및 출판·문화사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조은 도쿄신용조합의 파산 등 금융사업의 몰락으로 상공인들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조총련은 전반적으로 재정적, 이념적 기반의 침하와 더불어 조직몰락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①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침하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교육지원금을 원조 받는 조총련계 학교는 한글공부 등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공민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상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총련계 학교에서는 교실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비치되었고, 각종행사 때에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찬가가 제창되며 주체사상교육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조총련의 주체사상교육은 북한 및 조총련의 쇠락과 더불어 재일 한인사회가 1·2세에서 3·4세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재일한인 1세들이 가슴속에 늘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3·4세대들은 일본사회에 정주(定住)하려고 하였고, 특히, 3·4세의 젊은 세대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치사상교육에 거부감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재일한인 3·4세들이 일본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조총련계 학교의 개인승배교육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면서

의 정계 및 의회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1야당인 사회당에게 접근하였다. 조총련의 사회당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1971년 11월 16일 일본 사회당을 기반으로 하는 일조우호촉진연맹(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결성되도록 하였다. 일조우호촉진연맹이 결성됨에 따라 일본사회에서 조총련의 위상은 제고되었고 아울러 일본·북한의 관계까지도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조총련 교육사업은 입학자의 매년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갈등 및 한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 1조에 정해져 있는 정규학교 즉 '1조교(條校)'가 아니고, 학교교육법 제 83조에 정해져 있는 '각종학교(各種學校)'로 인가받았다. 따라서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은 졸업 후 검정시험을 통해서 학력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는 조총련이 일본 문부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직원 채용, 교과서검정, 교과과정편성 등에 있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었는데,⁵⁸ 결과적으로 일본사회에서의 학력 불인정을 초래하여 일본사회에 정주하려는 재일한인 3·4세들로 하여금 조총련계 학교를 기피케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둘째, 재일한인 3·4세들은 대체로 일본형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념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정주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자본주의사회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는 재일한인 3·4세들은 조총련계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북한으로부터의 교육지원금의 대폭 감소는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고충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한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사업의 갈등, 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총련은 (1) 1992년부터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하였고, 나아가 (2) 일본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의 공적 원조를 받기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총련의 교육사업은 여전히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으며, 조총련계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재정난으로 교원조차 제대로 확보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⁵⁸ 조총련으로서는 일본 문부성의 재정적 지원 대신 북한으로부터 교육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교육 등 북한공민으로서의 사상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② 조총련 출판문화사업의 갈등과 한계성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계 한인사회가 1·2세에서 3·4세 중심으로 바뀐과 더불어 젊은 한인세대가 증가하면서 조총련 출판문화사업은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3·4세 한인들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개인우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울러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치중하고 있는 조총련계 기관지들에 대해서도 외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조총련의 출판문화사업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의 조총련계 기관지에 대한 관심 저하에 따라 『조선신보』, 『조선화보』 등의 판매부수 및 구독부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경영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조총련은 이와 같은 출판문화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하 유관 사업체로서 독자경영을 하고 있는 『구월서방』을 『조선신보』와 통합하여 적자재정의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구독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2일부터 『조선신보』의 내용을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생활, 문화, 오락, 취미 등에 관한 기사를 확대하였다. 또, 조총련은 1996년 3월 5일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래의 북한선전위주의 『조선화보』를 폐간하고 1996년 7월부터 새로운 잡지 『이어』(日本語)⁵⁹를 발행하였다.

『이어』는 조총련계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재일교포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법률, 문화, 스포츠, 취미, 오락 등을 양질의 컬러화보에 담고 있고, 광고도 조총련계 기업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전니쿠(全日空) 항공사, 코카콜라 등의 선전을 싣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의 이와 같은 변모는 이념보다는 현실생활을 중시하는 3·4세 한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3·4세 한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

⁵⁹ 조총련은 1996년 3월 16일 10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새로운 잡지의 제호(題號)를 현상·공모하였다. 공모 마감 결과 『이어』, 『바람』, 『날개』, 『한길』, 『메아리』, 『8·15』 등 2,206건이 접수되었다. 그중에서 조총련사회가 일본 사회내에서 계속 발전하여 이어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글인 ‘이어’가 채택되었다.

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양·정보지를 지향한 편집혁신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의 출판·문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 조총련계 금융사업의 침하와 상공인의 이탈

조총련은 일본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은신용조합을 통하여 금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아울러 조은신용조합을 김정일 정권과 조총련의 자금기반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총련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조은신용조합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경영함에 따라,⁶⁰ 조은신용조합은 일본의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일본경제가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자 조총련의 조은신용조합의 정치적 경영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1997년 5월 조은신용조합의 본거지인 오사카(大阪)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였고, 1999년 5월 도쿄(東京)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였다.

이와 같은 조은신용조합과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파산에 따른 조총련의 금융사업의 위기는 지난 40여간 조총련을 지탱해온 경제적 구심력이 급속하게 와해되도록 하였고, 아울러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조직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나)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실태

일본 국내외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구도가 붕괴됨에 따라 조총련계 한인사회는 이데올로기보다도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특히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⁶⁰ 朝銀信用組合이 재일한인 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줄 때, 가장 우선시하는 심사기준은 조총련과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사업성보다도 현금액수와 조총련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의 20%까지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례금의 절반은 조총련의 조직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북한에 송금하였다고 한다.

3·4세의 젊은 세대들은 혁신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성향은 조총련의 교육사업, 출판·문화사업 등을 사양길로 접어들게 하였고, 나아가 북핵·납치문제로 일본내 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면서 조총련의 동요를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총련계의 조선학교는 30개 이상, 학생은 6,000명 이상 감소하였고,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조총련계 한인들도 ‘조선적의 조선’을 북한이 아닌 ‘식민지 이전의 조선’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으며, 아울러 무국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중앙본부는 위기의식아래 조직의 사수·보존을 위해 2003년 10월에 개최된 ‘전국 산하단체·사업체 책임자 회의’를 통해 ‘7개월 운동’을 전체 산하단체에 하달하였다. ‘7개월 운동’ 관련 지침에서는 조총련 조직의 사수·보존 및 제(諸)활동의 강화를 위해 신세대 조직원 중심의 조직 활동 전개와 동포권의 옹호활동의 강화를 2대 중심 운동방향으로 삼고 있고, 신세대 조직원 영입, 민족교육사업 강화(학생 유치활동 등), 지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동포생활 봉사활동(기존의 「동포생활상담 종합센터」 활용) 강화 등을 중점 시행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조총련 중앙본부는 조직 결속 및 재건을 위해 ‘7월 운동’을 점점·독려하고 있다.

또 조총련내 개혁파는 맹목적인 북한 추종노선을 비판하고 재일한인들의 실생활에 역점을 두는 개혁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2004년 2월 17일 ‘총련의 재생을 바라는 네트 포럼21’을 개설하였다. 즉,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조총련 비판 및 개혁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활동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현직 활동가와 상공인 수십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04년 5월 28-29일 개최된 제 20차 전체대회에서는 재일한인

들의 현실적 요구와 지향에 맞추기 위하여 강령 개정의 단행과 더불어 재일한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전환을 표명하였다.

즉, 조총련 중앙본부는 제 20차 전체대회에서 최근 년 간 조총련 및 조총련계 한인사회가 종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뒤, 재일 한인사회 속의 깊이 뿌리박은 조직이 되도록 현실적인 동포들의 권익옹호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하여 조총련 사업을 ‘새 세대의 애국애족운동’ 및 ‘각계각층의 재일한인들을 망라한 폭넓은 동포운동’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강령개정을 단행하였다.

조총련의 제20차 전체대회에는 사민당은 물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민주당의 후지이 히로히사 간사장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이와 같은 제 20차 전체대회를 조직 사상적 강화 및 재일한인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2005년의 ‘조총련 결성 50돌’의 기념사업을 전조직적·동포사회적으로 치루기 위해 조직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 중앙본부는 조직 강화를 위한 새 세대의 민족성 계승을 지향하여 민족문예체육사업을 ‘폭넓은 동포운동’으로, 민족교육사업을 ‘전 기관, 전 동포가 돕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일본사회에서의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 한국대중문화의 인기 급증 및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조총련계 한인들이 증대하고 있고, 아울러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조총련계 한인들도 ‘조선적의 조선’을 북한이 아닌 ‘식민지 이전의 조선’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으며, 무국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조총련의 조직 및 사상 강화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조총련의 조직적 침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조총련에서 이탈한 한인들이 조총련계의 한인사회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속

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민단과 조총련의 벽이 약화되고, 허물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다.

3. 재일 한인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한 재일 한인사회는 대체로 하층 노동계층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며, 대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는데, 1945년 종전시 약 200-240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으나,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 한인사회는 분열되고 대립하였다.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 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 「신조선건설동맹」(건동) ➡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즉 재일 한인사회는 비극적인 한국근대사의 쓰라림과 민족의 분단의 아픔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재일 1·2세 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고, ‘일본사회에 정착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동화·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거의 사망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 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일본 정주생활에 따른 동화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3·4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일 한인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한인 3·4세대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이념 등 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즉, 재일한인 3·4세대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으로의 귀화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외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및 긴장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단과 조총련간의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있고,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영향으로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즉 국적 전환을 한 한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조총련계 한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민단계 한인들과 조총련계 한인들의 화해·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재일한인 2·3·4세대의 민족의식 약화로 인하여 민단과 조총련이 조직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대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민단·조총련의 교류 증대는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인사회에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도입하여 정착한 소위 ‘뉴커머(new comer)’ 그룹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본에 왔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국과의 연계아래 일본속의 현대한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과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화해·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단·조총련·뉴커머 등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협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는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발전시

키면서 한일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발전과 더불어 한일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문화적 상호이해의 증대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구축에도 매우 중요하다.

Ⅲ

중국내 한민족 사회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한반도(조선반도)의 국가들을 중화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로서 취급하였고, 이에 반해 한반도 상의 국가들은 중국 대륙의 국가와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해왔다.

최근 불거진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분명히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한반도 간의 관계 속에 그 뿌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들이 오늘날의 한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즈음에 개최된 한국의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이다.

2000년대 초 현재 200여만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이민과는 달리 특히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예들이다. 조선족 3·4세대는 물론 5·6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말을 잊어가고 있으며, 모국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민족의식과 주재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⁶¹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들 스스로는 절대다수의 조선족들이 민족전일체성, 즉 민족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⁶²

⁶¹ 이정춘, “위성방송과 남북화합,” 『방송연구』, 겨울호 (2001.12) <<http://jcrhie.p e.kr/index/4article/article01.htm>>.

⁶² 정관룡, “세기교체와 중국 조선족 가치관의 변화 및 민족전일체성문제,”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p. 10.

1.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가. 1945년 해방 이전

중국 대륙과 한반도 상의 국가 간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선족(한민족)이 오늘의 중국 영토에 이주하여 집단적인 군락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에서 1940년대까지에 걸친 시기이다.⁶³ 중국 조선족들의 이주 시기는 대체적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조선조 중엽부터 대한제국의 초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이며, 제2기는 ‘한일합방’ 이후에서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까지이다.⁶⁴

제1기의 시기에는 한반도 북단의 함경도 지방이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지방인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조 말엽인 1860년을 전후하여 현재의 함경도 지역인 육진 지방을 휩쓴 대흉년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이들은 압록강을 넘어 만주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 조선 북부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조선인 농민들은 대거 만주에 들어왔고 청나라도 일부 지역의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淸朝)는 1875년 압록강 지대의 농토를 경작하는 조선인을 관리하기 위해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봉금령(封禁令)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조선반도 건너편의 연안지역으로 정착하는 조선인 농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고, 1881년에 오늘의 연변지역에 거주한 조선농민들의 수가 이미 1만여 명에 달하였다고 추정된다.⁶⁵ 1883년 9월 청나라 정부는 조선과 「길림조선상민무역지방규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규약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 간의 변경무역이 개선되었다. 1885년에 도문강 이북지역에 길이 700여리, 폭 40~50리 규모의 지역이

⁶³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9), p. 4.

⁶⁴ 위의 책, p. 5.

⁶⁵ 연변조선족자치주개항 집필소조, 『연변조선족 자치주개항』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4), p. 52.

조선인개간구역으로 정해졌고, 이때부터 많은 조선인 농민들이 연변지구로 들어왔다.⁶⁶

특히 1885년 봉금령의 폐지와 더불어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만주로 이주하였다. 1897년 통화, 환인, 관진, 신변 등 지역으로 이주해온 조선인 농민들의 규모가 8천여 가구 3만여 명에 달하였고, 1905년에는 장백, 립강, 집안, 안동, 봉성 등지의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 농민들이 9천 9백여 가구가 되었다. 그리고 1904년 연변지역의 조선인 이주민들이 5만여 명이었고, 1909년에는 18만여 명에 달하였다.⁶⁷ 1907년 연길청 경내에 있는 조선족은 5만여호에 달했으나, 한족은 조선족 총수의 1/4에 미치지 못했다.⁶⁸ 1910년경에 이르러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대부분이 동북3성, 즉 길림성, 요녕성 및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체 규모는 15만~20만 명 정도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청나라 말엽까지 조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간도 지방은 버려진 땅이었으며, 조선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봄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와 경작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정착촌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인 농민들이 강을 건너 중국의 동북부 지역인 만주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중국 조선족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⁶⁹

첫째, 청조를 수립한 만족이 대거 산해관 이남으로 이주하면서 두만강 이북지역은 인적이 드물었고 황무지로 내버려져 있었다. 경제적 피폐의 상황에서 광활한 벌판은 조선인 농민들에게 새로운 땅을 제공했다. 둘째, 청조의 봉금령이 해제된 이후 변경지역의 이주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셋째, 이전부터 강을 넘어 경작하곤 했던 조선 농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다른 민족과 충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⁶⁶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3), pp. 18-19.

⁶⁷ 『조선족간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pp. 4-8;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pp. 5-6 재인용.

⁶⁸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p. 19.

⁶⁹ 위의 책, pp. 19-20.

주었다. 넷째, 조선조 말엽 지방 관헌들의 압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반도와 이웃한 간도 지역이 조선인들에게 신천지만은 아니었다. 19세기 후반기부터 간도 지역에 조선 농민이 이주하면서 청나라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개척민을 모집해서 황무지를 일구게 만들었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청나라는 변경 지대를 지키기 위해 조선인 개척단을 변경 지대에 정착시키기도 했다. 조선족들이 황무지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자 청나라에서는 만족 관헌이나 치발역복(薙髮役服)에 순종한 조선족을 보내 토지조사를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토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을 점산호라 한다. 점산호가 강과 산을 대충 경계로 삼아 온종일 말을 타고 한 바퀴 달린 후, 그 안을 자기 땅이라고 선포해 조선인이 일군 땅에서 지주 노릇을 했다. 점산호가 생긴 뒤부터 농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먼저 그들과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첫 해에는 소작료를 10퍼센트 물었다. 그리고 개간한 지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점산호에게 땅을 빼앗겨 농민은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소작료를 주어야했고, 복종하지 않는 농민은 소작권을 몰수하고 내쫓아버렸다. 소작인보다 머슴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하였다. 또한 국경 수비를 하려고 내려온 군인들은 조선인 마을에서 약탈과 폭행, 강간을 제멋대로 했다. 이러한 약조건 속에서도 만주의 조선인 인구는 나날이 늘어났다.⁷⁰

제2기의 시기가 시작된 1910년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주의 강압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조선인의 이동은 더욱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데, 1910년부터 1931년까지 첫 번째 단계이고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이 이루어진 만주사변의 시기부터 1945년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기까지 두 번째 단계이다.⁷¹

첫 단계의 특징은 일본제국주주의 강점 아래서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많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려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끊

⁷⁰ 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1),” <http://hanminjok.or.kr/cgi-bin/technote/read.cgi?board=chosunjok-pds&y_number=2>.

⁷¹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p. 6.

입없이 중국으로 이동한 점이다. 1910년~1912년에 중국 동북부 지역의 조선인 규모가 4만여 명이상 증가하였으며, 1910년~1920년간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 이주해 온 조선인 수는 19만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1922년 3월까지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65만여 명이며, 이 중에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수가 44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하였다.⁷²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강제 이민정책에 의하여 많은 조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중국에 이민해 오게 된 것이 특징이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제는 장춘과 대련 간의 철도 경영권을 얻어 그 보호와 관리라는 명목으로 여순에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를 설치했다. 그리고 용정에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간도파출소(間島派出所)를 설치했다. 이것이 나중에 간도총영사관이 되어 간도에 사는 조선인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었다. 그 뒤, 간도에는 18개의 경찰서가 세워졌고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가 조선인을 통치했다.⁷³

1910년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1910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조사법’을 반포하였다. 이후 8년여에 걸쳐 진행된 토지 약탈은 조선 정부의 공유지와 농민들의 일부 사유지를 독점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식민회사는 조선에서 제일 큰 지주가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일제는 국내의 농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식량을 공개적으로 약탈하는 ‘산미증산계획(産米增産計劃)’정책을 실시하여 1927년부터 1931년 사이에 조선에서 6600만 석을 약탈해갔다. 이리하여 조선 국내에서 생계를 더 유지하려면 할 수 없었던 많은 파산 농민들은 만주로 이주했다. 조선인들은 1910년 이전에는 주로 간도와 그 주변의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간도 주변을 훨씬 벗어난 더 내륙으로, 지금의 하얼빈이나 몽골 자치주까지 이주하였다. 1931년 일본은 ‘9·18사변’을

⁷² 위의 책, p. 6.

⁷³ 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2).”

일으키고 이어 중국 동북 3성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국내의 계급갈등을 완화시키고 동북지역을 중국 침략의 후방과 식량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1936년 이후 20년 간 100만 가구, 511만 명의 일본인을 이주시킬 이민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8월까지 일본은 중국 동북에 4만여 가구, 10만여 명을 이주시켰다. 동시에 조선총독부와 위(僞) 만주국(滿洲國)은 「재만선인지도요강(在滿蘇人指導要綱)」을 제정하고 매년 조선에서 1만 가구를 이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들은 「만선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집단개척민으로서 많은 조선 농민들을 동북지방에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 1937년부터 1941년 사이 24,000여 호의 조선 농민들이 이주되었다.

1931년 9·18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는 괴뢰 만주 제국을 세우고, 그 후 14년 동안 일본은 만주를 통치했다. 조선족에게는 더욱 심한 억압과 고통의 14년이였다. 9·18사변 이전에도 조선족 거주 지역에는 일본 경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1933년 이후에는 북만주와 남만주 모두 33개 조선족 거주 지역에 경찰이 주둔했으며 자위단까지 조직되었다. 1936년의 조사에 의하면 319군데에서 모두 1만 8,131명의 사람들이 일본군 지휘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 위에 일제는 항일 세력의 정보 수집이나 일본군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도 했다. 1938년 이후 조선족 거주 지역의 집단 농장이 등장하였는데 일본군이 조선족을 감시·통제하여 독립군에 전달되는 자금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었다.⁷⁴

1939년 말에 중국 동북 지방의 조선족 인구수는 116만여 명에 달하고 1944년에는 165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1945년 광복을 맞아 100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은 한반도로 돌아가고, 1947년 동북 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1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1949년에는 111만여 명의 수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맞이하게 되었다.⁷⁵

한편 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1881년 약 1만 명 정도에서 1910년에

⁷⁴ 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3).”

⁷⁵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p. 8.

는 약 1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1년까지 20년간 약 29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44년에는 약 64만 명으로 성장하였다.⁷⁶

19세기 중엽 이후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멸망하기까지의 조선인들의 중국 동북지역, 즉 만주로의 이주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860년대를 전후한 극심한 자연재해와 조선 왕조 탐관오리의 약탈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한 경우이다. 둘째,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병합한 이후 그들의 압제를 피해서 이주한 농민들과 항일 운동가들이 있다. 셋째,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시기,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통치하기 위해 친일 조선족을 교사나 의사, 파출소 순사 등으로 채택해서 이주한 경우가 있다. 넷째,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개척하기 위해 농민들을 강제로 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이주시킬 때 이주한 경우로 이때가 가장 많은 조선족이 이주한 시기이다. 이 밖에도 6·25전쟁이 정전체제로 마무리된 이후 김일성체제를 싫어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만주로 이주한 경우이다. 그 중에는 극소수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⁷⁷

농민의 이주로부터 시작한 중국 조선족사회의 확장은 점차 중국 조선족사회가 모국과는 다른 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⁷⁸ 이러한 중국 조선족사회의 역사적인 공동체 형성을 한 조선족 학자는 중국 조선족사회의 ‘이중적 사명’의 측면으로 설명한다.⁷⁹ 첫째, 1907년 일제는 중국 동북부의 ‘한인보호’를 구실로 조선족을 통치하려 하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중국 조선족도 한반도의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둘째, 1909년 9월 중·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을 계기로 중국 정부도 조선인을 ‘교민’으로 취급하였다. 중국 정부

⁷⁶ 홍승직 편, 『연변조선족자치주연구』 (서울: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88), p. 6;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p. 23 재인용.

⁷⁷ 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1).”

⁷⁸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p. 47.

⁷⁹ 박창욱, “조선족공동체의 역사, 현황과 전망,” 국제고려학회아시아분회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00), pp. 44-47.

는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인들의 귀화를 강요하였으며, 이는 민족동화정책이었다. 셋째, 이 당시 많은 반일 인사들이 중국 동북조선족지구로 망명하여 반일민족사상을 선전하고 학교 설립, 반일단체 조직 등을 통해 인재 양성과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반일민족운동은 조선 민족 독립과 해방의 쟁취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생존과 해방을 쟁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조선족 인민들은 반일민족투쟁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착취하고 있었던 중국 봉건세력과의 투쟁도 동시에 치러야 했다. 즉 반일 투쟁을 통한 조선 독립과 혁명은 반제반봉건투쟁의 중국 혁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었다. 다섯째, 이러한 중국 조선족의 ‘이중사명’은 1905년 일제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중국 동북지방에 침입한 이후부터 1945년 항일전쟁승리에까지 이르는 특정한 역사시기의 특정한 사명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중성 내지는 이중적 사명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사회의 성격을 말해준다. 즉 한편으로는 모국에 대한 민족적 유대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으로의 이주 초기부터 압록강, 두만강 유역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북 3성의 농촌지역에 집거생활을 유지해오으로써 비교적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중국 조선족의 집거구역 형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다.⁸⁰ 첫째, 집거생활은 그들의 생존 수단이었다. 대부분의 이주 조선인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익숙했던 생존수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고, 수전(水田)농사를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조선인들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이다. 혈연, 지연, 인연 등을 중시하고 상부상조하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유지해온 조선 민족의 전통문화가 초기의 집거구역 형성에 기여하였다.

셋째, 역시 교육을 숭상하였던 조선의 전통과 종교의 영향을 들 수 있

⁸⁰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pp. 49-52.

다. 조선족은 간도 지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또한 종교가 조선족 주민들의 단결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응집력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한 강제 대규모 이민이 초기 조선족사회의 집거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나. 1945년 해방부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시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광복이 이루어진 1945년 이전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분화되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국에 대한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광복 이후 4년 동안의 중국의 내전과정에서는 떠나온 모국과는 상관없이 많은 조선족이 참여하게 되었고 희생자도 많이 생겼다. 중국내전 시기 동북 3성에서 참군한 조선족은 6만여 명이 되며 정규군 이외 공안부대, 기간대 등 지방무장조직에 참가한 조선족의 수도 10만 명이나 되었다.⁸¹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족들은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 조선족들은 많은 소수 민족 중의 하나로서 중국 사회주의체제 내에 편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의 조선족들은 모국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약화되었다.⁸²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복속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개혁·개방 이전 각 시기에 중국 특유의 정치운동, 즉 50년대의 ‘반우파운동’과 ‘반지역민족주의운동’, 60년대의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조선족은 심대한 박해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조선족은

⁸¹ 김성걸, “중국 조선족현황분석의 방법론에 관하여,”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p. 13.

⁸² 김관웅, “계통론의 견지에서 보는 중국 조선족문화의 현황과 전망,”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p. 55.

1950년대에 6·25전쟁에 수 만 명이 참가하였고 북한의 건설지원에도 나갔다. 연변 지역에서는 1960년대 경제적 곤란시기와 문화혁명시기에 수 천 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⁸³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민족의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으로 중국 땅에서 삶의 터전을 튼튼히 닦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내의 5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국 정부는 각 민족을 평등의 원칙에서 다루는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각 민족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일민족이 비교적 밀집된 지역에는 자치제도를 실시하여 민족자치지역을 건립하였다. 자치권리의 기본내용에는 “당지 민족의 특점에 의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는 일정한 비례의 민족 간부가 있어야 한다”거나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⁸⁴

이에 따라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족은 민족의 자치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자치지역을 세웠다. 1952년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세웠는데, 당시 중국 조선족 인구의 49.7%를 차지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따지면 조선족이 자치주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였고, 조선족 간부는 전 주 간부 총수의 74%를 점유하였다.⁸⁵ 1958년에는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을 건립하였으며 조선족이 집결된 농촌에는 조선 민족향(民族鄉)을 세웠다. 그리고 조선족이 분포한 지역의 각급 정부의 행정 분야에는 조선족 간부들이 적지 않게 배치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족은 ‘북방의 유일한 벼 재배 민족’으로 불릴 정도로 동북지역 수전(水田)농사의 선구자였다.⁸⁶ 당시 조선족 농민의 대부분이 수전경영을 했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전에는 보통 주위의 다른 민

⁸³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p. 56.

⁸⁴ 김성걸, “중국 조선족현황분석의 방법론에 관하여,” pp. 11-12.

⁸⁵ 김중국, 『세기교체의 시각에서 본 중국 조선족』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99), p. 9.

⁸⁶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pp. 44-45.

족 농민보다 농업 수입이나 생활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치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은 기타 민족 자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었다.⁸⁷

교육면에서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유산을 지켰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이주 시기에도 어디든 마을이 생기는 동시에 서당이 세워질 정도로 자녀교육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갔다.

연변대학은 중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민족대학으로서 1949년 중국 건립 이전에 연길 세웠고, 1958년에는 중국에서 첫 번째 농민대학인 새벽 농민대학을 용정에 세웠다. 조선족의 교육보급율과 문화인 보유율은 중국에서 제일 높았고 문맹률은 제일 낮았다. 1952년에 조선족 지역에서는 초등교육이 보급되었으며 1958년에는 중학교육이 보급되었다. 이것은 중국 어느 민족보다 높은 문화 보급 수준이었다. 그리고 1995년 연변대학,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등을 합병하기 전 몇 십 년 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 3, 4개의 대학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같은 규모의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중국 조선족은 우리말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운영하여 우리말 사용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며, 타 민족문화의 포위 속에서도 고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족의 민족 특성도 파괴되지 않고 보존과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족은 그들의 선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주해 온 초기부터 대부분이 민족마을을 세워 생활하였으므로, 언어, 문자, 풍속,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 민족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개방 이전에 뚜렷한 변화가 없이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전과 같이 농업 민족으로 민족 특성이 농후한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다.

⁸⁷ 위의 책, p. 45.

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기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회의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작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기회였다. 그동안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조선족 사회에서도 지식 엘리트들이 근대화를 이끌어 나갈 자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개혁·개방은 조선족 사회에서도 농민들의 도시진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⁸⁸

중국의 조선족들은 전통적인 경제생활 방식인 소농경제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상품화, 도시화, 산업화의 시대의 조류에 뛰어들게 되었다.⁸⁹ 사실 연변이나 기타 조선족 집거구역은 연해나 북경, 상해 같은 대도시들보다 산업이 낙후되었고, 기존 산업들도 대부분 침체와 불경기 속에서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 개혁·개방 정책의 힘을 입어 중국 사회는 신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족 사회도 중대한 변화와 발전 시기를 맞이하였다.⁹⁰

첫째의 변화는 영농 체제의 완전한 개편이다. 조선족은 벼 재배에 능숙한 농업 민족이었다.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 농촌에서도 인민공사제도에 토지경영권을 생산집체에서 장악하고 집단화 노동을 실행하였으며 수입도 평균 분배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하락시키고 노동효율의 향상을 가로막았다.

1980년대 초기 농촌체제개혁이 시작되었다. 농촌개혁을 통하여 토지사용권을 직접 농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중국 농촌의 영농체제를 완전히 개편시켰다. 1983년 전후 조선족 농촌에서는 보편적으로 농업생산 개인책임제를 도입하고 토지경영권을 각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작업을 끝마쳤다. 이 제도는 생산자 나름대로 생산하고 농산품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노동 효율도 크게 높였다. 과거 집단노동화 시기 모내기를 보통 20여 일씩 하였으나, 생산도

⁸⁸ 박민자 중국연변가정연구소 소장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⁸⁹ 정관룡, 『세계속의 우리 민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6).

⁹⁰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pp. 57-64.

급 책임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모두 끝마쳤고 가을걷이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생산책임제 이후 농사일은 각자의 이익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알곡생산량을 제고하기에 힘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두 번째의 변화는 경제생활의 향상과 동시에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농업생산 개인책임제를 실시한 이후 농민들이 농업생산의 경영자주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과 노동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농업생산 시간을 단축시켰다. 농민들의 여유시간과 농촌 잉여 노동력이 많이 생기게 되자 농민들은 농업생산 이외의 다각경제경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수많은 조선족 농민들은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탈피하여 다각경제경영의 조류 속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농산품, 소백화 및 민족 전통음식 등의 소매로부터 시작하였다. 후에 자금이 모이고 상품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음식점을 꾸리고 기업을 꾸리는 방향으로 차원을 한층 더 높였다.

다른 한편 조선족은 국제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외개방이 시작되면서 일부 조선족들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이른바 ‘보따리장사’를 시작하였다. 북한과의 보따리장사는 말할 것도 없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러시아와의 보따리장사에서조차 조선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전 한국에서의 약장사도 한때는 조선족 가운데서 인기를 끌었으며 약장사로 돈을 모은 이도 적지 않았다. 1990년대에 와서 조선족의 해외 인력수출도 아주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대외경제 활동은 조선족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과시하고 있다.

셋째, 조선족의 경제활동의 변화는 민족경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농민들은 수전농사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나, 다각적인 경제경영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농림·어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향진기업을 세우고 또 시장소매, 음식점 경영 및 기타 사업으로 넓혔다. 동시에 국제무

역, 국제노무 등 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시장경제법칙과 경영 방식을 습득하고 경영 영역과 규모를 넓혔다. 이것은 노동력 요소의 재구성을 촉진하고 과거의 단일한 농업구조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 결과 과거 1차 산업의 비율과 수입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2차 및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우를 보면, GDP에서 1차, 2차 및 3차 산업이 차지한 비율이 1980년의 각각 23.6%, 51.2%, 25.2%에서 1997년에는 각각 16.8%, 41.6%, 41.6%로 변화되었다.⁹¹

넷째, 중국의 개혁·개방은 조선족의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의식구조의 심각한 변화도 초래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은 조선족 농민이 전통적 소농경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조선족 농민들은 과거의 자족적 농촌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재빨리 상품 경제 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 동북 3성에서 제일 큰 종합시장인 연길시 서시장의 7,000여 개 난전 가운데 조선족 경영자가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⁹¹ 『연변통계년감』 (중국통계출판사, 1998), p. 35.

2.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실태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중국 조선족사회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경제생활의 향상, 빈부의 격차 발생 등의 현상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한 조선족 학자는 인구위기, 교육위기, 언어위기, 인재위기, 이미지위기 등 5개의 위기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⁹²

첫째, 인구위기는 개혁·개방정책으로 농촌 인구가 도시 및 타 지역,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둘째, 교육위기는 농촌의 공동화로 전통적 민족교육진지가 축소되고 향촌 교육이 파탄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언어위기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점차 새로운 세대에서 조선어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넷째, 인재위기는 조선족 간부의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다. 다섯째, 이미지위기는 조선족동포사회에서 점차 배금주의, 향락주의, 한탕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인구위기에서 여성들의 가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타 지역에서나 한국 등지에서 노무현장에 더욱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위기의 문제에서 낡은 농촌 교육시설에서 교육하기보다 도시의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학습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언어위기는 중국사회에서 조선족들은 중국 공민으로 살아가야 하며, 따라서 한어(중국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잘할 줄 알아야 한다. 조선족들이 대학입시에서 조선어의 특혜를 받기 때문에 한어를 등한시 하는 것도 이유이다. 인재위기에서 어느 사회에서건 지성인 계층이 중요한데,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중국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도 엘리트계층이 타 계층을 끌어갔기

⁹² 김중국, “세기교체에서 보는 중국 조선족,” pp. 29-33.

때문이다. 이미지위기와 관련, 조선족들은 중국내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왔으며, 비록 그 순위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우수 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면 계속 우수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가. 인구 이동과 집체구의 약화문제⁹³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이동과정은 3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의 현재의 시기를 제3차 이동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여 동북3성 거주 조선족들 중 많은 수가 한국 등 해외 또는 중국의 타지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초래한 변화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와 농촌간의 유동인구가 신속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1995년에 약 8,000만 명의 농민이 도시에 진출하여 취업하거나 취업 기회를 찾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동시에 조선족 인구의 유동도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유동은 인구 이동의 한 가지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호구(戶口)를 원적에 두고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유동하는 공간(지역)의 변동을 말한다. 인구 유동은 목적과 원인에 따라서 그 형식도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인구 유동을 경상취업형(經商就業型), 공무원형(公務型), 문화형, 맹목형(盲目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조선족 인구 유동은 일정한 거리의 유동을 통하여 노동력의 산업간 이전과 직업 이전을 실현하는 행위로 주로 경상취업형에 속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많은 조선족 농민들이 과거처럼 단일한 농업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인구 유동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향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중도시로, 전통적으로 살아온 동북 집결 지역에서 산해관 이남 지역으로 그 유동은 끝

⁹³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pp. 69-77.

이 없었다. 조선족은 도시에 진출한 이후 처음에는 여성들에 의해 전통음식 난전, 시장소매 등 자그마한 장사로부터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음식점 경영, 나아가서는 유흥업과 기타 사업 및 한국투자기업 취직 등으로 조선족 농촌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대·중도시로 향한 조선족 인구는 자꾸만 늘어났다.

현재 동북3성 조선족 집결 지역에서 산해관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 인구는 20만 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중국 조선족 총인구의 1/10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북지역 내의 조선족 인구 유동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80여만 명의 조선족 가운데 타지역에 나간 인구가 7~8만 명이나 되고, 자치주 내의 유동도 아주 빈번하다. 조선족 인구 유동은 중국내 다른 민족보다 앞장서 가고 있다.

조선족 인구 유동의 또 하나의 현저한 특징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날로 심화되고 국제정세가 날로 심화되고 국제정세가 날로 완화됨에 따라, 조선족은 지연, 인연 및 언어 등 동질성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친척 방문으로 한국에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약(中藥)을 팔기 시작하였고, 후에는 점차 일자리를 찾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해외 노무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족들이 해외에 대량으로 진출하였다. 조선족의 해외진출은 한국, 러시아, 일본, 리비아, 사이판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해외노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조선족이 20여만 명에 달한다. 국외 진출에서 앞장선 지역은 흑룡강성이며, 국외에 나간 조선족이 몇 만 명에 달한다. 1990년부터 1997년 말까지 흑룡강성 조선족 촌에서 해외로 진출한 일꾼이 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1997년 초까지 해외에 파견한 각종 노무일꾼이 연인원 3만 1,0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외사처의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연변에서 근 3만 명이 러시아에 갔다 왔으며, 해마다 600~1,000명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의 조선족 유동인구의 규모도 크고 분포지역도 넓어졌다.

1980년대 말에 와서 조선족은 동쪽의 연운항(連雲港), 서쪽은 오로목제(烏魯木齊), 남쪽의 심천(深圳), 해구(海口), 서남쪽은 반지화(攀枝花)·곤명(昆明)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 유동인구는 상대적으로 한국투자기업이 많은 북경과 천진, 요동반도, 산둥반도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북경과 산둥성 내에만 해도 조선족 유동인구가 각기 수만 명이 된다고 한다. 1982~1990년간의 일부 도시의 조선족 인구 변화에서 조선족 인구 유동의 추세를 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1982~1990년 일부 도시의 조선족 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	북경	상해	천진	석가장	남경	제남	해구	성도
1982	3734	389	802	134	107	80	무	109
1990	7375	744	1575	466	315	329	42	240
증가율%	97.03	91.26	96.38	247.72	194.39	311.25		120.18
연도	진황도	대련	광주	련운장	청도	연대	심천	주해
1982	108	2042	71	13	83	48	1	무
1990	869	4816	204	93	355	244	130	41
증가율%	704.63	135.83	187.32	615.38	327.71	408.33		

출처: 전국 제3·4차 인구조사통계.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9).

조선족 유동 인구의 직업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⁹⁴ 우선 직업적 특성으로서는 민족 전통음식업, 즉 조선족 식당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족 유동인구는 한국투자기업 또는 한국인과 연계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조선족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등 동질성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통역, 관광안내원, 무역·관광·대외기관의 한국담당업무, 한국측 기업 대리, 한국인 대상 음식업·오락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조선족 유동인구의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우선 연령이 18세~50세 사이

⁹⁴ 위의 책, pp. 75-77.

의 청장년이다. 부모를 따라 온 학령인구와 자녀를 따라 온 노년 인구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매우 적다. 성별 구조는 35세 이상의 유동인구 층 남녀 비율은 비슷하나 3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조선족 유동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관계된다. 산업구조면에서 조선족의 유동인구는 대부분 민족 전통음식업 관련 업종과 한국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 구조면에서 조선족 인구가 보유한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다. 유동인구 가운데 청장년들은 거의 초중 졸업 이상의 문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에는 대학 졸업생들의 유동도 매우 뚜렷하다.

조선족 인구 분포의 도시화가 지속화하고 있다. 조선족 인구 유동은 농촌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조선족의 도시 인구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북경을 비롯한 북방과 연해지역의 조선족 유동인구의 절대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였으며, 조선족의 전통적 집결 지역인 동북 3성과 내몽골자치구의 여러 도시에도 조선족 인구가 크게 증가되었다.

1982년과 1990년의 인구조사통계에 의하면 8년 동안에 연변조선자치주 연길시 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77.04%에 달하였다. 흑룡강성 하얼빈시와 목단강시의 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각기 19.82%와 19.75%이고, 길림성 장춘시와 길림시 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각기 48.66%와 22.36%에 달하였다.

200만 인구에서 몇 십 만이 조선족 집결 지역을 떠나 움직이고 있으며, 조선족 지역이 ‘공동화(空洞化)’하고 날로 축소되어 간다. 이것은 반면에 또 한족들이 조선족 개척지역에 점진적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조선족의 민족성을 보존하고 지탱하여 온 공간이 날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장년들의 유출은 조선족 집거구의 간부 충원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어떤 조선향은 50세 이상의 촌 간부가 2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문화 소질도 높지 않았다. 어떤 마을의 촌 간부는 60세가 되었

어도 직책을 맡겨 줄 후계자가 없어서 계속 촌 간부를 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욱 심한 경우는 마을에서 적당한 간부 후계자를 찾지 못하여 향진 정부에서 기관 간부를 파견하여 촌 간부를 겸임하기도 하고 또는 인근 한족 마을에 가서 간부를 데려다 쓰는 경우도 있었다. 농촌 기층간부의 유실과 그 후계자의 부족에 따라 일부 조선족 마을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정체성의 문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 요건, 다시 말해 중국 한족사회로의 동화 요건으로 이민 기간의 장·단기 여부, 집단거주(집거지역)의 강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모국(한국·북한)과의 관계의 강도, 공동의 신앙 보유 여부, 조선족 내 엘리트 집단의 유무, 타민족과의 선진성의 우수 여부 등 7개의 요인을 들 수 있다.⁹⁵

중국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이중민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민족(한민족/조선민족)으로서의 속성과 중화민족으로서의 속성이다.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체 내에 있으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족 농촌 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학교 운영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왜냐하면 농촌 학생 지원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에 진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고향 친척들에게 의탁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습과 생활 단속이 결핍되고, 도시 거주지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되고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

조선족 처녀들의 대량 유출은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조선족 농촌 인구 유동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인구, 특히 미혼 여성들의 대량 탈출이다. 현재 조선족 농촌에는 미혼여성들이 거의 보이

⁹⁵ 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지 않는다. 이 상황은 많은 조선족 농촌의 성별 비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보통 미혼 남녀 청년 비례가 20:1이며, 길림성 화룡시 승선진의 경우 1996년에 남녀 청년 비례가 40:1에 달하였다. 때문에 허다한 조선족 농촌에는 장가갈 나이에 대상자를 구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들은 도시에 진출하여 음식점, 노래방 등을 경영하여 일정한 돈을 모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도박과 사회 윤리를 벗어버린 채 금전주의, 향락주의, 한탕주의 등의 유혹에 빠져 도덕적 퇴폐 현상, 즉 도박, 기반, 매춘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선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한·중 수교 전후 조선족은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한국에 많이 진출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 이익도 아주 컸다. 이러한 현상의 파급 효과가 바로 조선족 사회를 휩쓴 ‘한국 붐’이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한·중 수교는 중국 조선족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조선족의 대량 한국 진출은 그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밀접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 진출에 따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 현상으로 조선족 사회는 여전히 ‘한국 바람’에 들떠 있으며, 향후 생활 영위를 한국 노무에 걸고 만사를 제쳐놓고 한국 가기에 열중하는 경향이 아직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일부 범법자들이 소위 한국 입국 수속을 해 준다는 미명하에 많은 조선족을 기만함으로써 선량한 조선족들이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이는 조선족 사회의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도덕을 뒷전에 두고 출국을 위하여 수단을 가지 않고 여권과 비자를 위조하거나 위장으로 결혼하며, 심지어 밀항까지도 기도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선족 사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족 사회의 앞날에 대한 비관이 높아졌으나,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지도자들은 재검토 결과 아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족 동포사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⁹⁶

나이가 든 조선족은 모국과의 친화도가 높은 것이 일상적이지만, 최근 젊은이들도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친화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 정부에 친화된 사람들은 나이가 든 경우에도 오히려 모국과의 관계를 경계하기도 한다. 즉 중국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민(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시장경제 속에서 상업적·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현재 중국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장사 또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조선족 남성의 체면치레 때문이다. 중국에서 조선족이 사업이나 상업 등에서 선진화를 이루려면 한족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중국 정치사회를 잘 알아야 한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조직은 중국 공산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선족이 특정한 조직을 꾸리는 것은 본질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모든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을 비롯하여 각급 수준의 당 조직의 허가와 통제를 받는다. 전국적인 조직은 항상 중앙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심지어 학문을 위한 학회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 학술 행사도 당의 통제 아래에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의 자율적인 사회적, 정치적 조직은 꾸리기가 어렵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꾸릴 이유는 중국 자체에서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중국 정부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들도 중국내 소수 민족은 그 지역에서 중국 공민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역정부의 영도 하에 잘 살아가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조직은 형성

⁹⁶ 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중국 조선족들은 2003년부터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있다.

다. 조선족 민족 사회의 해체문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개혁·개방정책과 선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전만능주의가 생겨나고, 도덕성의 결핍 현상이 나타났다. 서방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것은 하고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야 하는데, 조선족 사회는 서방의 부패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패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혼율 상승, 남녀관계 문란, 허황되게 큰돈을 벌려는 생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개혁·개방시대에는 돈과 물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돈을 따라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의 가출로 말미암아 편부모 가정의 탄생, 부부관계의 모순, 이혼율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족 사회에서는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활동이 증대하였다. 시장경제에 남성들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소수민족정책의 폐단이라 생각한다. 소수민족정책이 우리 민족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고, 학교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선족 사회 혼인가정문제는 중국 사회의 거대한 환경 여건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만, 모국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민족성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짜이혼, 위장결혼, 이혼율 급성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산업 인력 진출로 조선족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또한 중국 개혁·개방진행과정에서 중국 조선족들의 인구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

조선족 사회는 한국의 영화, 가요, 대중문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족애,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는 타 선진민족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선족은 과거처럼 문화정도가 높다거나 민족자질이 높다고 자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⁹⁷ 과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 30개 자치주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순위가 점차 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개방의 진행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의 시기에 조선족 내에서는 교육의 피폐화로 문맹자가 발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는 지금과 같은 매우 낮은 자연증가율로 따지면, 조선족 전반의 생존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우선 경제와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더욱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소비적인 경제보다는 생산적인 경제의 발전이 요구된다.

개혁·개방과정에서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 연변자치주 고위간부를 역임한 한 조선족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⁹⁸

중국 조선족은 해외로 진출하거나 중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은 청도, 선양 등지에서 새로운 집거지(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치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예컨대 내몽고자치주의 몽고인들의 비율은 25% 정도 밖에 안 되는 반면, 현재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38% 정도라는 것이다.

⁹⁷ 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⁹⁸ 김영만 전 연변자치주 상무위부주석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5일.

또한 중국 조선족 사회는 선진문화, 선진민족의 문물을 도입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무조건적인 모방이 아니라 중국 공민(국민)의 토대 위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특색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⁹ 중국 조선족 사회는 오랜 기간의 생활 공간, 의식 형태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따라서 본류상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이질성 및 다양성 등을 중시하고 각 지역과 나라의 특색에 맞는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라. 한국과의 관계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한·중 수교 이후이다.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의 동북부 지방,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과의 접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 구조가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인력 수요가 생겨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대체적으로 60%이상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 동포들의 상당수는 한국에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¹⁰⁰ 그러나 조선족들의 상당수는 한국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 3성의 조선족 중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인구는 최고 5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으나, 한꺼번에 다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들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고, 그들의 선조들이 주로 일제강점기의 박해를 피하여 이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갈 수 있

⁹⁹ 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¹⁰⁰ 김중국 교수 겸 연변해외문제 연구소 부소장 면담 내용, 2004년 6월 15일.

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중국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무의 수출로 연변자치주 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03년도에 한국으로부터의 은행 수입은 약 6억5천만원(중국 위안 기준)으로 연변자치주 재정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조선족이 한국에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의 노무 수출은 중국 조선족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에 일종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조선족의 출입국을 다른 해외동포들과 차별 없이 허용한다면,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 정부가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혼란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외국 사람과 비교해서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조선족의 문제를 중국 당국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탈북자는 수용하면서 조선족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실시하지 않는데, 왜 다른 나라에게 이중국적을 실시하게 하는가?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혹은 국내에서의 여론 때문에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의 탈북자들을 내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의 조선족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탈북자와 조선족과의 빈곤의 정도와 잡힌 후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인권을 고려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같은 동포인데 북한사람은 포용하고 조선족은 그러지 못하는가?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 평등, 자유를 보장하고 타국민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정부의 정책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요컨대 중국 조선족들은 한국의 해외동포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

다. 해외동포법은 이중 국적법이 아닌데 마치 이중국적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자유왕래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자처럼 중국 조선족에게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3. 중국내 한민족 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가.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족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장백조선족 자치현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집거하고 있는 중국내 한민족은 음식, 주거, 복식, 의례 등에서 한민족 전통 문화요소를 유지하고 있다. 김치를 먹고 온돌에서 생활하며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민족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깊은 내면세계에서는 여전히 한민족 의식이 잠재해 있다.

일부의 중국내 한민족들이 조선인 또는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한다.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조상의 나라일 따름이지 모국은 아닌 것이다. 연변출신의 한민족으로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중국내 민족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정신철은 국민의식과 민족의식으로 구분하면서,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을 조국으로 인식(국민의식)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적 동질성(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¹

중국내 한민족들이 자신을 중국 국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중국경제·정치의

¹⁰¹ 정신철, 『중국 조선족』 (서울: 신인간사, 2000), p. 143.

주류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계인’(border person)으로 살고 있다.¹⁰² 장기 이주의 인생역정을 통해 2가지 이상의 민족적, 문화적 범주 속에서 어느 한곳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 정체감의 사이에 위치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내 한민족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중국에 한국의 발전상이 소개되면서 자신이 조선족이라는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기대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동시에 자신들이 ‘경계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중국내 한민족에게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고국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대표팀 간 운동경기 시 길으로는 중국을 응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¹⁰³

남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볼 때, 1992년 한국과 수교하기 이전까지 중국내 한민족은 북한을 고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항일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을 민족의 고국으로 여기고 중국을 인민의 조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족의 고국인 북한을 위해 기여하고 대약진운동 시기에는 상당수의 중국내 한민족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이 중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을 때 중국내 한인들은 북한을 고국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을 알게 되면서 남북한을 등거리에 두는 2개의 고국관을 가지게 된다.¹⁰⁴ 경제적으로 못사는 북한보다는 부유한 한국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¹⁰⁵

¹⁰²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서울: 통일원, 1996), pp. 110-111.

¹⁰³ 위의 책, pp. 106, 108.

¹⁰⁴ 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서울: 백산서당, 2002), pp. 116-117.

¹⁰⁵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04.

나. 조선족 자치주 설치·운영

중국내 한민족사회는 여타 지역의 한민족사회에 비해 강력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집단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변자치주와 장백자치현 등은 중국 한족사회와 격리된 폐쇄적 농촌공동체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민족은 중국 동북지역에 벼농사를 전파하였는데, 물줄기를 따라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논농사를 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변자치주는 중국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지역으로 남아있다. 연변자치주 주도인 연길은 중국 전역에 분산된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로서 여기서 한국어로 출판되는 신문·잡지 그리고 한국어로 방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중국내 한민족의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1996년 중국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연변대학은 해외 한민족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9월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으나, 1954년 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자치주로 변경되었다. 자치구의 위상에서 한 단계 낮은 자치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념샤, 광시, 신장, 시장, 네이멍구 자치구 등 중국내 5개 자치구에 비해 집거면적이 협소하고 인구수도 적어서 자치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58년 9월에는 장백조선족 자치현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조선족 집거 지역에 8개의 자치진과 34개의 자치향이 유지되고 있다.¹⁰⁶ 자치주와 자치현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자치구자치법에 의거,¹⁰⁷ 조선족이 주장과 현장을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권력서열이 가장 높은 당서기는 한족이 담당하고 있다.

1950년대 초까지 중국내 조선족의 99% 이상이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

¹⁰⁶ 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p. 80.

¹⁰⁷ 민족자치구자치법 제17조에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자치민족 주민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中華人民共和國民族自治區自治法』(北京: 法律出版社, 2001), pp. 21-22.

였는데, 점차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2년 98.23%에서 1990년에는 97.14%로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내 가장 대표적인 조선족 자치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우, 195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당시 60%를 넘었던 조선족의 비율이 1990년에는 40% 아래로, 1997년에는 39%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연변조선족 자치주내 한족의 비율이 57.99%에 달하여 조선족자치주로서의 위상이 현격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경에는 연변자치주내 한민족의 비율이 20%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⁰⁸ 흑룡강성의 경우, 조선족 촌이 1990년 501개에서 1996년 491개로 감소하였고, 조선족 인구는 28만 8,870명에서 27만 5,93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⁹

<표 III-2> 연변자치주 내 조선족 비율 변화

연도	자치주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비율
1953년	926,207	557,292	60.17
1964년	1,294,629	623,136	48.13
1982년	1,871,512	754,567	40.32
1990년	2,079,902	821,479	39.50

출처: 정신철, 『중국 조선족』 (서울: 신인간사, 2000).

중국내 한민족 집거지가 위기국면에 처하고 있는 이유는 조선족의 탈 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 그리고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이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연변지역 등 중국내 한민족 집거지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게 되었고, 이는 한민족 집거지 젊은이들의 도시이동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발전된 경제실상이 소개됨

¹⁰⁸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p. 80; 리홍우, 『조선족의 전망』 (하얼빈: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7), p. 28.

¹⁰⁹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97.

로써 많은 중국내 한민족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진출하게 된다. 수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중국 농촌지역에는 장가 못간 노총각들이 많은 실정이다. 중국내 한민족 20-30대 여성의 20% 정도가 한국으로 시집을 떠나 조선족 마을에 늙은 총각과 노인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¹¹⁰ 조선족 마을의 미혼 청년 남녀의 성비가 20:1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¹¹¹

중국내 한민족 농촌 공동체 와해 현상은 집거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산재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성조선족 촌에서는 원래 280호이던 농가가 79호로 감소하였고, 길림성 구태시 흥광조선족 촌의 경우는 387호에서 50호로 감소하였다.¹¹²

중국내 조선족 자치지역에서 한민족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한족을 이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지역 중 분리독립 움직임이 가장 심각한 신장과 시장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족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더 많다.¹¹³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 고국을 가진 민족이며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따라 한·중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한족을 조선족 자치지역에 이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내 한민족사회 와해의 또 다른 원인은 타 민족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낮다는 점이다. 1982-1990년 사이 중국 전체 인구증가율이 12.61%에 이르렀고, 소수민족 전체 인구증가율은 36.33%였는데 비해 조선족의 인구증가율은 8.96%에 불과하였다. 조선족의 낮은 인구증가율은 중국내에서 한민족의 지위를 강화시키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¹¹⁴

¹¹⁰ 최우길, “중국 조선족사회와 교육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1998.12.3), p. 5.

¹¹¹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102.

¹¹² 위의 책, p. 85.

¹¹³ 胡兆量 主編, 『中國區域發展導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조선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 유지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족들이 가라오케와 술집을 드나들면서 퇴폐문화에 빠져들고,¹¹⁵ 조선족의 민족성 보존 공간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의 화령기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보다는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해야 대학입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민족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경우 흑룡강성 소재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 학생 81,072명 중 한족학교 취학자가 29,925명으로 36.91%에 달하였다.¹¹⁶

중국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주덕해와 문정일 등이 대장정에 참여하여 중국 공산당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연변대학 설치에 기여하는 등 연변지역 한민족을 단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장과 시장지역 소수민족이 이슬람교와 라마교 등 자체적 민족 종교와 민족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중국내 한민족의 경우에는 고유 종교와 민족 지도자 부재로 점차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요인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중국내 고국을 가진 소수민족

1980년대 이래 경제건설과 반패권과 함께 국가통합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해 온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¹⁷ 신장과 시장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¹¹⁴ 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研究』, 1997年 第6期, p. 23.

¹¹⁵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99.

¹¹⁶ 위의 책, p. 110.

인하여 중국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은 당 통일전선부와 국무원 장관급 부서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내 여러 민족과 계층을 통합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조선족은 몽골족을 제외할 경우 중국내 55개 소수민족 중 고국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조선족문제를 여타 민족문제에 비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내 조선족들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에게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영내로 진입하여 중국 동북3성 지역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3성 지역 조선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조선족 출신인 이덕수를 국무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한 것도 중국이 조선족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표로 볼 수 있으며, 2002년 2월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정부분 동북3성 지역 한민족의 친한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¹¹⁸

중국내 한민족은 고국(한국)과 조국(중국)이 접경한 지역에 거주하는 ‘과계민족’(跨界民族)으로서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중국내에서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그리고 중국내 정치상황이 혼란할 경우에도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정부로부터 ‘조선특무’ 또는 외국의 간첩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문화대혁명시기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주덕해 등 연변자치주 지도자들이 홍위병에 의해 숙청을 당하고 자치주 내에서 한국어 교육과 사용이 제한을 받았다.¹¹⁹

¹¹⁷ 鄧小平, “目前的形勢與任務,” 『鄧小平文選』 (1975-1982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203-237.

¹¹⁸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의 정치·외교적 의도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의 의미, 의도,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2004년 2월호, pp. 4-8 참조.

¹¹⁹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114.

중국내 한민족에게 고국이 있다는 점이 중국정부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 따라 조선족의 모국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¹²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중국내 한민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위상을 중국에서 자신의 위상과 동일시하고자 한다.¹²¹ 한국기업과 관광객의 중국진출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민족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이 한민족이라는데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내 한민족은 그들의 한국 내 출신지에 따라 남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점이 발견된다. 요녕성 지역 한민족은 대체적으로 평안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변지역은 지리적으로 함경도와 접경하여 함경도 출신들이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흑룡강성 지역의 한민족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한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¹²² 상대적으로 흑룡강성 출신의 한민족이 한국을 방문한 인사가 많으며 한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북한지역에 고향과 친지를 둔 중국내 한민족들일수록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내 한민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을 고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남북한관계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하겠다.¹²³ 중국내 많은 한민족들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과 남한을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중국내 한민족들은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내 한민족에 대한 한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¹²⁴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¹²⁰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p. 96.

¹²¹ 위의 책, p. 217.

¹²²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p. 98.

¹²³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90.

것인가”에 대해 11%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38.4%가 약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절반 정도의 중국내 한민족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높은 교육·문화적 소양을 지닌 민족

중국내 한민족은 1860년대 심각한 가뭄과 조선조말기 학정에 시달려 두만강을 넘어 중국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이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버려진 땅을 논으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전파한 개척자들이다. 1910년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자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는 독립투사들이 중국 동북부지역에 진출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일본의 만주지배를 위해 강제로 많은 한민족들이 중국에 이주하였다. 중국내 한민족은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민족으로서 버려진 땅을 일구어 개혁·개방기 이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재중 한인들은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족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문화민족이다. 한민족은 문맹률이 낮고, 대학생 비율도 중국내에서 가장 높다. 1990년 중국내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 중에서 100만 명 당 대학수준 학력소유자를 보면, 한민족은 22,709명인데 비해 한족은 5,584명에 불과하였다.¹²⁵ 문맹률에 있어서도 한민족이 가장 낮는데, 중국전국 문맹률은 22.2%, 중국내 소수민족 전체 문맹률은 30.8%, 한족은 21.5%였으며, 조선족은 7%에 불과하였다.¹²⁶

이처럼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한민족의 교육수준이 다른 민족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과거부터 한국인이 가지고

¹²⁴ 최영관·임채완·김재기·김강일, “한국통일과 중국 동북3성 조선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권 제3호 (2001), pp. 105-106.

¹²⁵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154.

¹²⁶ 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p. 90.

있는 시농공상 관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민족 부모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란할지라도 자식은 많은 교육을 받아 도시로 진출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한족의 경우 사범계 대학졸업자들이 농촌지역 학교에 배치될 경우 상당수가 잔류하지만, 농촌지역 학교에 배치되는 한민족 교사들은 대부분 부임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에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중앙정계 진출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한민족의 정·재계 진출 인사는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중앙정치무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덕수인데, 그는 1998년 3월 제9기 전인대에서 국무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으로 발탁되었다. 1992년 13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계속 중앙위원으로 있다. 이외에 조남기 상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장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역임하여 현재까지 조선족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내 한민족들은 돈보다 명예와 체면과 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사를 천시하여 개혁기에 들어서 조선족 자치지역의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¹²⁷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후 중국에서 개인사업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한민족 중에서도 공직을 포기하고 개인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족과 달리 타산적이고 합리적이기 보다는 목표를 향해 무조건 돌진하는 경향을 보여 중국내 한민족이 운영하는 사업의 안정성이 약하고 투기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¹²⁸

¹²⁷ 위의 책, pp. 163-164;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pp. 119-120.

¹²⁸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p. 203.

IV

극동 러시아내 한민족 사회 : 연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11개 경제지역권 중 하나의 지역으로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4%를 차지하며 인구는 740만 명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사하공화국, 유테인 자치주, 추코트 자치주, 꼬랴크 자치관구, 연해 변경주, 하바로프스크 변경주, 아무르주, 캅차트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등 10개의 행정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극동지역의 남부인 연해변경주와 하바로프스크변경주, 아무르주에 살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슬라브계 민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19개의 많은 민족이 어울려 살면서 상이한 문화가 공존하는 여러 민족들의 접경지대이다. 우선 반정주와 목축 등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북방계 토착 민족집단, 둘째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유입되어온 민족집단이 있다. 토착민족으로는 우데게이, 에벤끼, 울리치, 꼬랴크, 추코트, 나나이, 이꾸트 등이 있다. 유럽지역에서 이주한 민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디비아 등 슬라브계가 주를 이루며, 아시아계는 한민족과 중국 한족 등이 있다.

1989년 당시 소련의 한인 총인구는 45만 6천 5백 명이었다. 이중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18만 3140명), 러시아(10만 7051명), 카자흐스탄(10만 3,315) 순이었다. 이후 한인 인구는 다소간의 변화를 거쳐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러시아에 15만 명, 카자흐스탄에 11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경우 사할린에 4만 3천, 연해주에 3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²⁹

17세기 초 러시아인이 극동에 나타났을 때 이 지역에는 북방계 토착민족들이 약 3만 6천여 명 살고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소수의 중국·조선·일본인들이 거주하였으나 마을을 이루지는 않았으며, 넓게 흩어져 300여 가구의 오막살이 농가가 있었다. 청나라는 자국민들이 연해주는 물론이고 만주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이는 노동력의 분산과 세금 징수 대상자들의 유출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청나라가 연해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청나

¹²⁹ 연해주 전체 인구는 230만 명이다.

라 영토에서 러시아 영토로 할양된 이후였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접하면서 발생한 군사적 요구가 주된 이유였다. 청나라가 일반주민에 대해서 만주 진출을 허용한 것은 1876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극동지역에 정착하기 보다는 상업활동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주거기간이 일정치 않았으며 나머지 중국인들도 반정부 상태에 머물렀다.

일본인들은 한인이나 중국인 보다 늦게 극동 지역에 진출하였는데, 이들 역시 캄차트카나 사할린에서 어업, 어업가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계절적이며 유동적인 성격의 경제활동을 하였다. 19세기 말까지 극동 전체 일본인 수는 최대 3만 명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러·일전쟁 등 정치적 이유로 그 수는 부침이 많았다.¹³⁰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한인들은 극동지역에 정착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¹³¹

한·중·일 등 아시아계 민족이 극동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러시아 당국의 느슨한 국경 정책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통제가 약하였고, 러시아계 주민이 희소하여 유동인구가 많았다.

본 장에서는 극동지역 중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¹³⁰ 심현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다diaspora(Diaspora),” 『한국시베리아연구』, 제4집 (2000), p. 125-126.

¹³¹ 위의 논문, p. 128.

1. 연해주 한인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가. 이주 초기 (1863-1905)

상당수의 한인들이 19세기 초부터 연해주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냥이나 채취를 하였고 농사의 경우에도 여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 후 돌아가는 계절형 이주에 불과하였다.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주는 1863년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러시아 자료는 말하고 있다.¹³² 지신허 마을의 첫 이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육진지방의 농민들이 월경해 오면서, 주민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1864년 30가구 140명, 1865년 65가구 343명, 그리고 1866년 100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후 높은 토지임대세 등 봉건적 수탈 등으로 고통을 받던 한인들은 1869년 조선에 발생한 대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각종 재해를 계기로 고향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정착을 위해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다.

한인들의 이주가 급증하자 러시아는 조선과 ‘월경자 인수에 관한 협정’을 맺기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초기에 한인 이주를 막으려던 러시아는 오히려 한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인들의 비축식량을 월경한 한인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한인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거주지역도 확대되어 포셋트 지역의 치진허, 안치허, 시디미, 아디미, 차피고우, 크람베, 후드바이 등에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이푼 강을 따라 콘스탄티노프스키, 카자케비체프카, 프지로프카, 코르사코프카, 시넬리코보, 코프로프카 등에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700여명이 거주하는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다.

한인들의 근면성이 알려지자 동시베리아 총독이 러시아 군대에 식량과 야채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주둔 구역 내에 인위적으로 한인마을

¹³² 이들은 무산의 崔運寶와 경흥의 梁應範이 이끄는 13가구의 함경도 농민들이라는 것이 러시아와 한국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병율,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집 (2003), p. 215.

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한인마을 중 가장 북쪽에 블라고슬로브노예라는 마을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103호 431명이 거주하였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는 당시 조선인의 연해주 유입이 얼마나 급증하였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가 조선과 수교를 서두른 것은 연해주로 몰려드는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 입장에서 동북부 지방의 농민 이주로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¹³³ 수교 조약에 의하면 러시아 거주 한인들은 3종으로 분류되었다. 제1종은 1884년 이전 러시아에 이주한 사람으로 이들에게는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영주를 허용하였다. 제2종은 1884년 이후 러시아에 입국한 사람으로 허가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3종은 러시아를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이 8,500명, 국적을 갖지 않은 한인이 12,500명, 계절노동자가 3,000명이었다. 1880년대 러시아가 한인들의 이주를 막은 것은 1879년 유럽의 오데사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가 열려 유럽인의 이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1890년대 들어 러시아는 기존의 한인 이민 억제정책을 바꾸어 한인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변강의 식민지화에 한인들을 활용하고자, 제1종에 속하면서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강제 귀화를 명하고 토지를 분배하였다. 제2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국기한을 연장해 주고 1종에 편입하였다. 이후 2종에 속하는 사람들 중 러시아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였다.¹³⁴

이와 같이 한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총독들이 있는 반면, 운테베르겔과 같은 총독은 한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그는 한인들이 러시아인과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한인들이 러시아에 충성을 바칠 것인가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그는 한인들의 귀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1종에 속하

¹³³ 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2004), p. 90.

¹³⁴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 49.

여 이미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의 자격을 재심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인들에게는 관유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어장과 광산에 근무하는 한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을 원호(元戶)라 하고, 귀화하지 않은 한인을 여호(余戶)라 하였는데, 원호는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한 반면, 여호는 토지가 없이 소작인으로 일을 하거나 광산이나 어장, 산림 벌채장에서 일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¹³⁵

당시 한인들 중 러시아에 귀화자격은 있지만 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귀화하여 거주허가증을 얻는데 은화 20루블이라는 거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 망명 이주 (1905-1937)

20세기 들어서는 일본의 합병으로 인해 정치적 망명 성격의 이주가 나타났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기 이전의 연해주 이주가 순수 농업이민이었다면, 1905년을 기점으로 한인들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대거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주민들 중 많은 수가 정치적 망명객이었으며 농민들도 연해주에서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1905년부터 의병운동 단체가 조직되고 일본군과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다. 1906-7년 지신희 마을의 총인구는 1,370명에 이르렀고, 1914년 이 일대 지역까지 합하여 2,000명에 달하였다. 지신희 마을은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서 초기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각지로 진출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들의 집거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기들이 집결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구한말 13도를 대표하는 13도의군을 조직하였으며, 한일합방 후에는 러시아의 탄압에도

¹³⁵ 위의 책, p. 50.

불구하고 성명회(聲明會), 권업회(勸業會) 등을 조직하였으며,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연해주와 만주일대에서 항일 의병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신한촌이었다. 신한촌은 1920년 4월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¹³⁶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곳은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¹³⁷

당시 연해주에는 11개 학교가 있었다. 창동, 의동, 신흥의숙, 인동의숙, 모형의숙, 수청, 급당서숙, 흥원, 명동, 동흥 등이 있었고, 신한촌에만도 계동, 신동, 세동 등 3개 학교가 있었다. 언론으로는 「해조신문」, 「大同共報」, 「대양보」,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1915년까지 폐간된다.

신한촌은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호열자라는 이유로 철거하여 시내에서 떨어진 북부 구릉지를 한인 주거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되자 일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는 홍군과 백군의 전투가 이어졌다. 1918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인 1명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4월에 육군 전투부대를 상륙시키고, 백군을 후원한다. 백군이 홍군인 블라디보스톡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 전원을 구속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홍군은 니콜라예프스크 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과 일본인을 습격하여 전멸시킨다. 일본군은 다시 4월 4일 대대적인 보복전을 감행하는 데, 이 때 신한촌도 습격을 당하게 된다. 일본군은 수백 명의 한인들을 무차별 사살하고 학교와 신문사를 소각하는 등 신한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인들은 무장 유격대

¹³⁶ 이밖에도 미국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의 시베리아 지방총회가 안창호, 이종호, 신채호 등에 의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르쿠츠크 중심의 자바이칼의 수도인 치타로 옮겨 1911년 소집된다. 1915년 해산될 때까지 이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

¹³⁷ 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지움, 『동북아시아, 한러관계와 고려인』 (2004.10), p. 40.

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한다. 당시 크고 작은 유격대 36개에 3,7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⁸

소비에트는 1920년 극동지역에 극동 시베리아 공화국을 건립하여 일본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군대의 철수 조건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불세비키 선전을 하지 말 것과 극동의 한인이 한반도에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수하자 소비에트는 한인들에게 약속한 토지의 분배를 파기하고 한인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킨다. 토지 없는 한인들은 북위 48도 5분 이북인 하바로프스크와 블라고베센스크 구역으로 이주시킨다. 극동 소비에트에서는 한인에게 토지의 임대를 금지하였으며 한인과 러시아인의 혼합 집단농장 콜호스를 금지하였다.

1924년 한인사회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기 전까지 18만 여명의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에 거주하였다. 한인들은 주로 농업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일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에 종사하였다. 한인의 90% 이상이 거주하던 하한스크(당시 포씨예프크)에서는 한국어로 행정업무가 처리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극장, 한인사범학교, 직업기술교육학교가 세워졌으며 국경지역에는 380개의 한인보통학교와 한인 콜호츠와 공장 노동자를 위한 대학예비학교가 있었으며, 한국어판 신문 7가지와 잡지 8가지가 발행되는 등 한인 사회가 번창하였다.¹³⁹

그러나 1929년 중·소간의 무력충돌로 연해주 남부의 하산스키 한인마을 162개가 이미 사라졌으며, 강제이주 당시 44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지신희 마을 역시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¹³⁸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p. 62.

¹³⁹ 김태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호, p. 57.

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기 (1937-1956)

1930년대 중반 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던 연해주와 함경도의 한인사회는 정치적 이유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된다. 1930년대 초반부터 소련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군사적 팽창으로 국경지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됨에 따라, 국경의 안전을 위해 외부의 적과 내통할 우려가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이주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36년 4월 28일 소련 서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아 공화국의 국경지대에서 폴란드 민족을 전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으며, 1937년 소련 남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등에서 쿠르드 족을 중심으로 강제이주가 이루어졌다.¹⁴⁰

1937년 극동지역에서 소련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호 스파이전이 가열되었고, 일본이 연해주 거주 한인들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밖에도 한인들의 항일운동이 일본에게 극동에 개입하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소련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킬 것을 결정하였다.¹⁴¹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와 전러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극동주 국경지대의 한인추방에 관하여”를 채택한데 이어, 9월 28일에는 소련 인민위원회가 “한인 추방에 대하여”를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의해 극동 지역에서 한인 17만 2천명이 국경지역을 떠나 내륙으로 강제이주되었다.¹⁴²

강제이주는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일까지 포셋트 구역과 그로테크브 구역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하고, 10월 15일까지는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시킨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한인 강제이

¹⁴⁰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pp. 370-71.

¹⁴¹ 당시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후 소련은 소위 적성민족으로 분류된 크리미아 탈마타족, 체첸족, 리투아니아족, 칼무크족, 인구수족 그리고 독일족 등 소수민족들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¹⁴²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p. 368.

주 이전에 한인 지도자 2,500여명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강제이주를 총지휘한 내무성 극동분국의 총책임자 인류슈코프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한인 강제이주를 완수한 후 스탈린의 숙청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우려하여 1938년 6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한인 지도자들은 노동수용소나 감옥에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⁴³

한인들은 먼 곳으로 이주할 것이니 2-3일치의 식량을 준비하라는 통지를 느닷없이 받았다. 이동 준비기간은 일주일, 심지어 2-3일 정도 주어졌다. 이동을 통보한 후 여행증명서를 압수하고 마을간 이동을 금지하였으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기차를 타도록 하였다. 가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놓고 갔으며, 이를 담보로 새 이주지에서 토지와 가옥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주 후원금으로 일인당 150루블을 받았으며, 각 호당 370루블을 받았다.

한인들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채 기차에 올라, 한 달 이상을 화물칸에서 보내야 했다. 추위와 용변문제, 식사문제, 물 문제 등 기차 안은 생지옥과 같았다. 그 안에서 해산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겁탈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유아들의 희생이 많았다.

9월 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강제이주가 완료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36,422가구 171,781명이 124칸의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는데, 이중 76,525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95,256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고 한다.¹⁴⁴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인들은 사막지대, 벌판, 강가, 원주민 마을 등 여러 곳에 나누어져 하차하였다. 원주민 마을에 내린 사람은 헛간이라도 얻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는 토굴을 파거나 갈대로 움막집을 짓고 겨울을 지내야 했다. 그러나 독거미와 독사, 갈대숲의 모기 등과 추위 등으로 인해 첫 겨울에 대부분의 어린이와 노인들

¹⁴³ 김메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p. 58.

¹⁴⁴ 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제10호, p. 142.

이 사망하였다. 한 기록에 의하면 1937년에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한인 7천명이 사망하였고, 1938년 4천 8백 명이 사망하였다.

강제이주로 인해 한인들은 사회·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고유문화 및 모국어를 상실하였다. 가축과 농작물, 주거지 등 재산의 손해와 민족적 상실감을 겪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은 강제이주를 실시하면서 한인 가구당 약 6,000루블 정도 되는 이주비용을 책정하여 지역별로 할당했으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유용하고 실제로 이주 한인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소련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재배 농장에 한인들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한인들에 대한 정착금과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은 한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한인들에게 주어진 물건과 이주비용을 자신들이 유용하고 한인들을 임시건물, 창고, 회교사원 등에 입주시켰으나, 이들은 곧 토굴 생활을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일종의 억류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갖은 역경을 극복하고 유목지대로 농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와 목화재배에 크게 성공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많은 노력영을 배출하기도 하고 유명한 꼴호즈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라. 억류 해제 (1956-1991)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에 종속되었던 주변 민족이 독립을 요구하였고, 레닌도 각 민족의 독립을 장려하였다. 핀란드, 폴란드, 발칸 3국이 독립하였다. 레닌은 주변에 있는 신생 독립국들과 평등한 관계의 동맹을 맺고 ‘러시아연방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레닌을 이어 받은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평등한 관계를 폐기하고, 다른 민족 공화국들이 러시아에 종속하는 상하관계를 만들었다. 스탈린은 다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면서,

소수 민족 지도자를 대거 숙청하는 등 소수민족을 억압하였다.

스탈린의 소수민족 억압정책은 후르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재수정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1956년부터 고려인의 정치적인 권한 정지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강제거주가 해제되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미 새로운 정착지가 된 곳에서 다시 떠나지 않았으나,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떠나 극동으로 향하였다. 이들이 연해주로 오는 길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정착하기도 하고, 연해주까지 돌아와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는 ‘큰땅치’라 한다.

1956년 중앙아시아 억류가 해제되기 전에도 연해주에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중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연해주에 직장을 배정 받아 근무하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이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사할린에는 강제 징집된 5만 명의 한인들이 남게 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위해 파견되었다. 또한 사할린의 젊은이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브스크로 유학을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부모들이 연해주로 따라오게 되었다. 1945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사할린 징용자들은 1972년부터 소련의 영주권을 얻기 시작하였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을 연해주에서는 ‘화태치’라고 한다.

또 다른 부류의 고려인은 북한출신들이다. 러시아는 1946년부터 북한 출신들에게 극동지역에 노동허가를 주었고,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벌목, 광산, 어업, 건축 등에 종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돌아가지 않고 극동지역에 체류하였다.¹⁴⁵ 이들을 ‘북선치’라고 한다. 1991년 소련해체 이전까지 고려인 거주자는 약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르시초프의 소수민족 보호정책은 브레즈네프의 등장과 함께 다시 보수화되었다. 브레즈네프는 1972년 소비에트 형성 50주년에 여러 민족의 차이가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단일 소비에트인’화를 공산당의 공식 정책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동화정책에 의하면 소수민족의 다양성과 민

¹⁴⁵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p. 47.

족적 요구는 반소비에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재이주기 (1991-)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재이주하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였다. 1989년 소련은 구공화국의 주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연방법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자 이에 반발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면서 소련해체는 가속화되었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혼란을 거듭하던 소련은 10개 공화국이 1991년 각기 주권을 보유한 채 관세 없는 경제동맹과 집단안보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였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동안 잠복해 있던 민족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에 따라 소련은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러시아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인을 각 공화국으로 이주시켜 러시아인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러시아 언어, 문화, 예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각 공화국에서 러시아인은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화 정책은 각 공화국내에서 오히려 민족정서를 자극하고 반러시아 정서를 고취시켰다. 이와 같이 잠재해 있던 민족감정이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분출된 것이다.

소련 해체 당시 소련에는 45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수는 소련 내 127개 민족 중에서 28번째로 많은 인원이나, 이들은 여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였다. 자치주를 갖지 못한 소수민족으로는 폴란드(110만) 다음으로 많은 수이나, 폴란드인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표 IV-1> 1989년 소련 내의 한인 분포

공화국	한인명수	공화국	한인명수
러시아	107,051	몰다비아	269
우크라이나	8,669	라트비아	248
백러시아	638	키르기스	18,355
우즈베크	183,140	타지크	13,431
카자흐	103,315	아르메니아	29
그루지야	242	투르크멘	2,848
아제르바이잔	94	에스토니아	202
리투아니아	119		

출처: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 112.

중앙아시아는 천년 이상 유목민의 사회였다. 1937년 이곳에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이곳에서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하였다. 맨 몸으로 토굴에서 생활을 시작한 한인들은 특유의 근면성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 러시아인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 650명 중 한인이 139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고려인 2, 3세대들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하면 높은 교육수준으로 의사, 기술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직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으나 현지어인 우즈베키스탄어나 카자흐스탄의 언어는 배우지 않았다. 공식 언어가 러시아어인 상황에서 한인들은 현지어를 배울 필요성도 없었고 현지어와 현지인들을 무시하기까지 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가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된 것이 한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어를 빨리 습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사회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현지어를 경시하였으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유목문화를 멀리하고 철저히 러시아화 되었다.

그러나 소연방 해체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중앙아시아 현지의 회교 민족주의 부활에 따른 이민족 차별 경향, 주요 민족의 자민족회 회복에 따른 언어 문제와 이에 따른 실직 현상, 독립국가 형성이후 경제난 등을

꼽을 수 있다.¹⁴⁶ 러시아인이 차지하던 주요 공공 직책이 현지인에게 넘어갔으며, 콜호스 등의 지배인 자리 역시 현지인에게 주어졌다. 심지어 한인이 다수인 콜호스에서까지 한인들이 밀려났다. 한인들은 현지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무시당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의 박탈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콜호스와 소프호스가 붕괴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소련시절 중앙아시아의 소련이 해체되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자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회교 사원이 복원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등 고려인들을 문화적, 민족적으로 압박하자,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절반 정도가 연해주를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연해주는 고려인들의 조상이 거주하던 제 2의 고향이라는 정서적인 이유가 있으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해주 정부가 재이주 고려인을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는 기후가 춥고, 경제적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이후 연해주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초반 800만 명을 넘던 인구가 낙후된 경제와 자연환경 등으로 유럽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극동지역 내에서도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경제위기와 외국 투자규모의 축소로 인해 농업생산물과 생필품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1996년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여 10-1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인구의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외로부터의 노동 이민 내지 사업을 위한 유동인구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연해주의 노동인력 부족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유입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외에도 다양한 한민족 집단이 연해주에 유입되었다. 우선 연해주 노동력의 부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¹⁴⁶ 이종훈,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한민족간 교류협력실태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8호 (2002), p. 150.

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 지역의 인구과밀과 실업에 따라 러시아로의 유입요인이 발생하였다. 중국 유입 인력의 70-80% 가량이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중국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한·러수교 이후 한국인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들은 주로 기업인, 상사직원, 공무원들로 주로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 등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수는 많지 않지만, 농업과 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연해주에 현재 52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였다. 분야별로는 무역업이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야쿠르트 등 15개사가 있으며, 제조업이 성한물산, 세신 등 30개사가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류업이 많으며 그 밖에 현대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이 있다.¹⁴⁷

농업 분야에는 고탐상사, 대야산업, 한농복구회, 대경, 새마을운동본부, 대한주택공사, 남양알로에, 농촌지도자, 발해영농, 신성산업, 경기농업경영인단체 등 11개 기업 및 단체가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50년간 100헥타르(ha)에서 수천 ha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벼, 메밀, 옥수수, 콩, 채소, 버섯 등을 재배한다.¹⁴⁸

또한, 1992년 한국은 나호트카 항구에 100만평의 토지를 49년간 차관하여 공단을 조성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000년 한국 토지공사가 나호트카 행정위원회와 “기본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아직 러시아 의회의 비준동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입주할 업종은 수산물, 목재가공업, 섬유류, 전자 그리고 기계류 등으로 한국기업 100개사, 러시아 기업 200개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북한에서도 노동력의 유입되고 있다. 연해주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연해주 극동대학교에 북한인들 20여명이 개혁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해주 정

¹⁴⁷ 연해주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에 6-7개사, 카차트카에 3-4개사, 사할린에 10여개사, 이르쿠츠크에 1-2개사가 진출해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자료집』 (2004), p. 96.

¹⁴⁸ 위의 책, p. 97.

부는 1만 천명의 해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북한에게 3천명의 인력송출 쿼터를 주었고, 이중 천 5백-2천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주에도 각각 2천 5백 명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 차원에서 연해주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해주는 남을 도울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며, 북한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북·중 관계와 같이 북한과의 국경무역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아예 오질 않는다.

2. 연해주 한인사회의 실태

가. 연해주와 인근의 현황

(1) 연해주

<표 IV-2> 연해주 한인의 출신지별 구성

명칭	기원	이주시기	수
고려인	19세기 이래 원거주자	19세기-1990년	20,000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자	1990년 이후	19,000
북한인	공관 및 상사, 노동자	1990년 이후	4,000
	탈북자	1990년 이후	500-1,000
한국인	한국상사, 공관, 종교인	1991년 이후	2,000 이하
	타국적 한국계	1991년 이후	200 이상
조선족	연변, 흑룡강성	1990년대	6,000

출처: 이진영, “러시아 연해주 조선족 이주민 집거지역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세계화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구축』 (2004. 4. 29-30), p. 624; 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지움, 『동북아시아, 한러관계와 고려인』, pp. 47-48; 연해주 현지 조사 (2004. 6. 14-18).

소련 해체 전 고려인 수는 모두 438,650명으로 추정되며, 고려인은 여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고 있다. 유동인구의 수가 많아서 러시아 거주 한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극동전체에 약 10만 여명의 고려인이 있으며, 연해주 일대에는 4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해주 한인의 반 정도가 우스리스크에 거주하고 있다. 우스리스크에는 「고려인재생기금」, 「고려신문」, 「새마을운동센터」, 「동북아평화연대」, 「아리랑 가무단」 등이 장치혁 전 고합 회장이 기증한 ‘까레이스기 돔’이라는 건물에 함께 있으며, 이 밖에도 「민족문화자치회」, 「우정마을」, 「아리랑 농장」 등 많은 고려인 단체가 있다.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우스리스크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해주 고려인의 놀이마당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21세기 동북아를 여는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관을 비롯하여 한글교육, IT교육, 병원, 법률지원, 고려인 단체 사무실, 자활지원 등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결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¹⁴⁹

한편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 연해주 한인사회의 중심이었던 블라디보스톡에는 2,5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렇게 적은 수만이 거주하는 이유는 균형인 이곳을 최근 러시아가 개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블라디보스톡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지만, 북한은 나호트카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이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의 생활비가 비싼 것도 한인들의 유입에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1990년 고려인협회가 조직되어 학교를 후원하고 8.15 문화절과 설날 행사 등 각종 한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1997년 고려인 재생기금이 파악하는 연해주 한인의 수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 3만 명 정도이다. 고려인 재생기금의 자료는 <표 IV-3>와 같이 지역별 한인 수를 말해주고 있다. 연해주 거주 고려인은 1991년 소련이

¹⁴⁹ 위의 책, p. 25.

해체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선주자와 소련 해체 후인 90년대 초반 이후 유입되는 이주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주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큰땅치’, 사할린에서 온 ‘화태치’, 북한에서 온 ‘북태치’ 등으로 대략 약 2만 명에 이른다. 1990년대 이주한 이주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재이주자들, 남북한에서 진출한 사람들, 중국에서 유입되는 조선족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표 IV-3> 연해주 고려인의 지역별 집계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우스리스크	15,400	하산스크	120
빨치산스크	3,000	쉬키둡스크	320
나호트카	3,000	나제진스크	200
블라디보스톡	2,000	라좁스크	100
알춤	2,000	올긴스크	50
스파스크달리	1,000	아르세니예브	328
달레고르스크	160	아누친스크	50
아르세니예프	328	카바렐롭스크	120
레쏘자보드스크	420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50
키로프스크	80	옥자빌스크	200
호틀스크	40	페르네이스크	60
한카이스크	20	우제브스크	80
체르니콥스크	500	야콥렙스크	65
미하일로프스크	400	합 계	30,063

출처: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 1997.

이들은 출신지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다. 중앙아시아 출신들은 주로 농사나 장사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이주자들은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일부는 극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채소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직접 시장에 팔거나 반찬으로 만들어 팔기도 한다.

고려인 이외에 정착의 목적이 아니라 장사와 건설노동자 등 돈 벌이를 위해 중국, 남한, 북한 사람들도 연해주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 출신들은 상사나 공관의 주재원이나 기업인들이며, 기업 중에서는 봉제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한국에서 진출한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동포는 동북3성으로부터 와서 주로 장사와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연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인력은 약 8,000명 선인데, 이 중 70-80%인 6,000-6,500명이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연해주를 방문하여 장사를 하는 조선족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족들은 연해주 각지의 재래식 중국 시장에서 주로 의류나 신발 등을 취급하는 장사를 하고 있거나, 노동을 하는 조선족은 주로 농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국 동포들도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는 약 4,000명 정도로 중국 노동자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연해주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노동력이 중국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에 할양되기 이전에 중국영토였던 이 지역에 중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러시아 당국이 우려하는 것이다. 연해주 정부는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과 연해주 정부는 1993년 11월과 1995년 3월 각각 「건설협력의정서」와 「연해지방과 북한간 농업·건설협력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995년 8월 아르쎀에 농업대표부가 설치되었고 9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건설대표부가 설치되었다.

금년 연해주 정부는 북한에게 3천명의 인력송출 쿼터를 주었는데, 실제 약 천 5백-2천 정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¹⁵⁰ 북한노동자는 성분이 좋은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 나오는데, 한번 나오면 4년 정도 일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입의 60%를 북한 당국에 내고, 20%를 현지의 북한대표부 관리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매우 어

¹⁵⁰ Victor V. Gorchakov 연해주 정부 경제부지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7일. 부지사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북한보다는 낮기 때문에 연해주로 오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톡 등 대도시의 고층건물의 건축현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층 건물의 건축현장은 일도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기피하는 일로서 북한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낡은 건물의 보수에도 북한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단체로 숙식하면서 생활하며 시내를 이동할 때도 3명이상 그룹을 지어 행동한다.

북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농업 노무자는 농장 일부를 맡아 농사를 짓거나, 몇 명씩 일을 찾아 계약을 맺기도 한다.

(2) 인근 지역: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

연해주를 제외하고 극동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사는 곳이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으로 각각 2만 명과 3만 6천명의 한인이 사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바로프스크에는 화태치, 큰땅치, 북선치 등 3종류의 한인이 있다. 화태치는 노어는 서투리도 일어에 능하여, 자기들끼리 모이면 일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1970년 후반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유학 온 자녀들이 공부를 마친 후 직장을 구하고 정착하면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야채와 꽃을 재배하여 장에 팔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인 그룹 중 가장 단결심이 강하여 생일, 결혼 등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고, 사할린에도 자주 방문하여 연결을 맺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온 큰땅치는 교수, 의사, 기술자, 공무원 등 전문직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사할린 사람들처럼 자주 모이지는 않으나, 자기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기도 한다. 화태치는 남한출신이 많다.

북선치는 해방 직후 북으로부터 파견 근로자로 왔다가 귀국하지 않고 잔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2백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노어가 서투르고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 시장에 팔아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조선공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모여서 주체 사상을 학습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의 대부분은 1942년과 1943년 강제 징용에 의하여 온 사람들이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게 되었다. 1956년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들이 사할린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 있었으며, 1958년 북한이 한인학생 천명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할린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남한출신들로 북한 국적이나 러시아 국적 모두 거부하며 한국으로 귀국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끝으로 북한출신 별목공이 있는데, 소련 붕괴 이전 2만 명을 넘기도 했던 별목공 수는 최근 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별목공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바로프스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소기업대표부라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작업장은 하바로프스크에 9개소와 아무르주에 6개가 있다. 이들은 아침 4시에 기상하여 밤 10시까지 일하며 겨울에는 영하 40도의 혹한과 싸우며 일해야 한다. 1인당 하루 백미 6백 그램을 지급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영양상태가 좋을 수가 없다. 혹한과 중노동, 영양부족으로 별목공들은 작업도중 병이 들어 죽는 일이 흔하다. 이들 일부는 일터를 도망쳐 러시아일대를 떠돌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고려인 마을로 들어가 은신처를 구하기도 한다. 별목공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떠도는 수는 약 1천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나. 명예회복과 법적 문제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국가가 행한 일이고, 국가가 박탈된 정치적 권한을 1956년 해제시켰지만, 재이주 조치는 없었으며 개별적으로 타 지방 이주가 허용되었을 뿐이다.

고려인의 재이주가 가능해진 것은 1989년 9월 「민족정책강령」에 의해 서였다. 이 강령은 소련 내 민족공화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공화국,

자치지역, 자치구 등을 구성하는 민족의 지위를 향상하며, 자치영역을 갖지 못한 소수민족의 권리를 확대하고, 특히 고려인을 포함 강제이주를 당한 민족을 열거하고 명예회복을 선언하고, 소련의 과오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발전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언급하였다.¹⁵¹

1993년 4월 1일 「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대한 연방법령」에 따르면, 강제이주와 강제이주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강제이주 이전으로 원상회복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러시아로 재이주하는 고려인은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은행대부, 취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법령이 집행되지 않았다.

2002년 7월 15일 새 법령이 공포되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강제이주된 개인은 개별적으로 재판을 제기하여 탄압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물론 탄압사실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연금혜택(한 달에 92-150루블 가산), 전기·물 사용료 50% 할인, 일 년에 한번 러시아 내 왕복 기차표 제공, 무료 전화가설(100달러), 석탄 50%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1993년 법령은 이주 1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2년 법령에 따르면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1956년 말까지 이주지역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956년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1956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강제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이다.¹⁵²

¹⁵¹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p. 176.

¹⁵² 김 류보비 이와노브나 변호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5일. 김변호사(여)는 소련 해체전 경찰간부로 연해주에 왔다가 소련 해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번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인터뷰는 「새마을 운동센터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다. 경제 생활

고려인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적 문제와 경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집을 팔아도 연해주의 집값에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고려인들이 과거에는 군인숙소 등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2002년부터 460동을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우정마을」을 건설하였으나, 현재 30동만 건설 완료된 상태이다. 이 중 고려인이 26개 동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우스리스크 시 당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초 계획은 정착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눌러 지내고 있다.¹⁵³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고려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국 상인들이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 농업과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고려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중국 조선족들에게 고용되거나, 건설 공사장, 농사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중국 시장에서 일할 경우 하루 150루블(6,000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 시장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생필품을 주로 팔고 있는 데, 가게 하나가 2-3평정도 되는 작은 크기로 대부분 1-2명이 장사하는 소규모이다. 특히, 안타까운 일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중 상당수는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공산당 간부 등 지식인들이었으나, 연해주에서 농사나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려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나라의 한민족 동포에 비해 생활수준이 떨어지나, 러시아 평균에 비하면 결코 나쁜 수준이 할

¹⁵³ 우정마을 촌장 강 발레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강 발레리는 1998년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하여 고려인재생기금에서 일하다 이곳으로 왔다.

수는 없다. 소련시절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할 때도, 고려인은 타민족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초기에 이주한 사람들 중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다. 예컨대, 블라디보스톡 수산대학 총장, 해양아카데미 부총장 등이 고려인이며, 우수리스크에서도 시의원 중 3명이 고려인이다. 이밖에도 구역 경찰국장, 연해주 검찰국 부국장 등이 고려인이다.

고려인들 중 크게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김 미하엘 페드로비치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는 1992년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하여 중국과의 무역으로 크게 돈을 번 후, 이를 기반으로 아리랑 농장이라는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였다. 아리랑 농장은 토마토, 고추, 양파, 생강, 옥수수, 그리고 수박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수출한다. 이 밖에도 돼지, 거위, 양 등의 축산과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식품가공도 하고 있다. 아리랑 농장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북한인이 합숙하며 일한다. 지금은 김 마할엘의 동생인 김 니콜라이가 경영을 맡고 있다.

라. 정체성

일반 고려인들도 높은 수준의 현지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보다는 러시아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러시아어를 완벽히 구사한다. 또한 애국가도 모르고, 한국 이름도 없다. 고려인들은 반드시 고려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러시아인 등과의 국제결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이 고려인들은 철저한 현지화로 자신들을 러시아인으로 생각하며, 이중국적을 원치 않는다.

중국 조선족과 같이 돈벌이를 위해 한국을 오려고 필사적인 것도 아니며, 미국 등지의 교포와 같이 언젠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귀소본능도 없다. 한국에 얼마간 체류하더라도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현지에서의 비자 장사 등이 없다.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은 동방의 유태인’이라는 말이 있다. 우선 고려인들은 여타 한민족과 같이 교육열이 높다. 1990년 소련 통계에서 고려인의

교육열이 소수민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⁴ 그러나 민족주의에 있어서는 유태인과 차이가 있다. 유태인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의 유태인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 같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은 민족주의 성향이 약하다.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차별도 없으며, 정치적 활동에도 고려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뿐만 아니라 연해주에는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나, 비교적 화합하여 잘 지내고 있다.

고려인 사회는 다양한 단체에 의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⁵⁵ 연해주에는 8개의 교회가 한국 목사에 의해 운영되며 천주교, 원불교도 각 하나씩 있다. 「고려신문」이 격주로 발행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하는 고려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고려인 재생기금」, 「동북아 평화연대」,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등이 있다.

「고려인 민족문화기금」은 1993년 설립된 고려인협회의 상부조직으로 우스리스크 7명, 나흐트카와 파르티잔스크 2명,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아르세네브, 알레고르스크, 알춤 각 1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해마다 추석 시기인 9월 말경 고려인의 날 행사를 거행한다. 3차년도인 2003년에는 북한 총영사(나흐트카 소재), 북한예술단 등 북한 측도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불참을 통보하였다.

고려인들의 출신지는 함경도 등 북한 지역이 많으나, 고려인 사회는 남북한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 고려인들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가까운 점도 있으나, 대한민국을 고국으로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고려인들을 동포애로 따

¹⁵⁴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민족문화자치회」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김 회장은 김 마하엘 페드로비치의 동생으로 한인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 농장」, 「아리랑 가무단」, 「아리랑 식당」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 의원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¹⁵⁵ 김 빅토르 알렉세예비츠 「고려인재생기금」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듯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인들은 고려인들을 외국에서 편히 산다고 냉대하였다. 고려인들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싹트기 시작하여, 1991년 수교 이후 강화되었다.

우슬리스크 소재 교회 「코리아 하우스」, 중고등학교 및 농대, 사범대 등에서 고려인 및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행한다. 「새마을 운동센터」에서 교육문화센터를 운영, 한글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치혁 고향 회장이 우슬리스크 「고려인 재생기금」에 「코리아 하우스」를 기부하였으며, 2001년부터 연간 천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다.¹⁵⁶

1995년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된 「한국교육원」도 고려인과 러시아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7명의 교사가 있으며, 연간 교육대상 3천 명 중 고려인은 3백 명이고 나머지는 러시아인이다.¹⁵⁷ 이 밖에도 연해주에서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극동대학교 한국학대학, 우슬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과, 블라디보스톡 경제대학교, 극동기술대학교 한국어과, 극동해양대학교 한국어 강좌, 우수리스크농업대학한국어강좌, 아르쎌극동대학 한국어과, 아르쎌 기술대학 한국어과, 경제대학교 동양어학교, 기술대학교, 유럽아시아학교 등 총 116개에 이르며 연 수강인원은 2,917명에 달한다.¹⁵⁸

마. 고려인 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

소련 시절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 소련 정부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지금도 러시아 중앙에 민족부를 두어 소수민족을 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인의 유입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으나, 한국인은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9세기부터 중국인이

¹⁵⁶ 연해주 새마을운동센터 회장과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¹⁵⁷ 한국어 교육원은 한국동포가 많은 19개국에 있으며, 극동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3곳에 있다.

¹⁵⁸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2004년도 한국교육원 현황” (2004.6.18), pp. 6-7.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였으며, 중국의 동북3성에 2억 명이 살고 있는 데 반해서 극동 러시아인은 7백만 명에 불과하다. 아직 고려인 사회가 소수 민족으로서 러시아 사회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한인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93년 4월 1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의 조치는 러시아연방내에서 민족을 단위로 하는 지역 분리주의를 잠재우고 연방적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자치를 획득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¹⁵⁹ 고려인 사회가 정치·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언제까지 러시아 정부가 언제까지 관대한 태도를 유지할지 모른다.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 러시아의 이익에 직결되는 민족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인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접근할 경우 자칫 한·러 간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현지 러시아인에게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¹⁶⁰ 러시아는 고려인 문제는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¹⁵⁹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p. 376.

¹⁶⁰ 박희수 한국교육원 원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7일.

3. 연해주 한인사회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가. 연해주의 중요성과 고려인의 역할

연해주 경제는 한·중·일 3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2002년 연해주의 대외 무역은 중국 60억불, 한국 44억불, 일본 28억불로, 이들 3국과의 무역은 연해주 전체 수출액의 94%, 전체 수입액의 89.5%를 차지하였다. 연해주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 역시 한·중·일 3국이 8억불로 전체 외국 투자액의 70%를 차지하였다. 한·중·일 3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러시아 외자 유치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연간 5천만 톤 비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0억불을 조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미 석유수출을 위한 대규모 항만 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베링해협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연해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태평양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일본은 서울·북경·모스크바로 이어지는 국가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환동해경제권'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하는 '신동해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은 사할린 유전 개발과 대형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루비노 항만의 확장사업, 나호트카 화력발전소 건설, 하바로프스크 국제공항 청사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할린 원유개발에 참가하여 이미 사할린산 원유가 일본에 수출되고 아무르주의 콩기공 제품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사할린섬과 홋카이도를 연결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극동 러시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도로, 철도 건설로 러시아와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고 있다. 자루노비와 중국 훈춘 간에 여객 및 화물통로를 개설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과 중국의 목단강시를 연결하는 여객철도와 항공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며 블라디보스톡과 상해의 항공노선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

시베리아의 알타이 주와 중국의 흑룡강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협력 상대인 동시에 경계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연해주와 접경국으로서 만주 지역에 엄청난 인구로 인해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860년 북경조약 이전 이 지역이 중국 영토였다는 점에서 더욱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러·일전쟁의 경험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북방 4개 도서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계 대상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연해주 지역의 진출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해주 정부 당국은 한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해주는 의류, 가전제품, 농산물 등을 대부분 값싼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해주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농업과 산업을 육성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주기 바란다. 연해주 정부는 군대가 철수한 곳의 막사 내지 군인아파트를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줌으로써 이들의 이주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인과 중국인이 간혹 농사를 짓더라도 이들에게는 농토 임대료 매년 갹신하지만, 한국인에게는 50년 장기 임대를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있다.¹⁶¹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도 벌목공, 농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북한의 중화학 설비 개척 사업을 도와주고, 통조림 임가공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영토가 합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창고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연해주는 에너지가 풍부하며,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한·러간에는 철도연결 사업, 나흐트카 공단

¹⁶¹ 동북아 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p. 18.

조성사업,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이 있다.

한·러간에는 직접적인 교역이외에도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결성한 동북아자치단체협의회에 한국의 9개 시와 일본의 13개 현, 중국의 12개 성, 러시아의 11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1993년 발족한 환동해권도시회의, 1994년 발족한 환동해권확대거점 도시회의와 환동해권지방정부지사장회의가 있다.

과거 중국과 수교 후 중국진출 시 중국내 조선족 사회가 한국의 중국진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한국의 러시아 진출에는 고려인 사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들은 정체성이나 언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연해주 정부차원의 경제적 호의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연해주에 다양한 민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인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60년 동안 ‘청정지역’이었던 곳에 아시아계가 밀려들어 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며, 고려인도 이러한 시각에서 예외일 수 없다.¹⁶² 1999년 연해주의 인구구성을 보면 2백 19만으로, 1989년의 2백 25만과 큰 차이가 없으나, 루스끼는 1999년 101만으로 1989년 196만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루스끼가 빠져나간 자리에 소수민족 특히, 아시아계가 대거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다민족 문화속 한민족 공동체의 시험장

연해주 지역은 다양한 한인이 거주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국가간 그리고 민족간 경계를 넘어서 상호협력을 시도하기 위해 접촉하기 시작한 접경지대이다.¹⁶³ 한인들이 동질성을

¹⁶² 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p. 89.

¹⁶³ 심현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다diaspora(Diaspora),” 『한국시베리아연구』, 제4집 (2000), p. 112.

유지하고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민족이 민족내부 관계를 잘 처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⁶⁴ 연해주는 중앙아시아, 사할린, 남북한 등에서 다른 문화를 갖은 한민족이 모여서 협력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중국시장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이 함께 일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연해주는 한민족 협력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연해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와 극동 러시아는 경제, 안보 등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의 ‘동북아시아’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 러시아에는 해양 분야, 철도 분야 등 협력할 것이 많이 있으며, 인간 안보,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협력주제가 있다.

연해주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인구감소 현상으로 필요분야에 전문가와 기술자가 부족한 실태이며, 투자 부진으로 재정이 취약하나, 철도, 자동차 등 운송의 중심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2010년까지 생산력 2배 증대를 지시하고 공업, 건설, 철도, 농업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 역사적 연고: 발해의 영역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고려인에 대하여도 타민족에 비해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며 긴장요소가 잠재해 있다.

우선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발해의 영토였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각별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 또한 한인 최초의 이민지이고, 중앙아시아 거

¹⁶⁴ 이진영, “러시아 연해주 조선족 이주민 집거지역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p. 639.

주 한인들의 원고향으로 이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 내에서 간도협약이 무효이며, 1860년 중국이 조선령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한 것도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장차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자치구 문제

1993년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한인들의 명예회복과 거주지 원상회복의 권리가 부여된 것을 계기로 한인들의 민족 자치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인들의 자치구가 처음 거론된 것은 강제이주 이전 부터였다. 1922년 고려공산당을 대표하여 한명세가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코민테른 제4차대회에서 극동지역에 한인들의 민족적·문화적 자치단위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이래, 강제 이주 당시까지 순수 한인들의 소비에트가 152개였고 타민족과의 혼성 소비에트가 100여개에 이르렀다. 연해주에 있던 81개의 민족구역 중 2개가 한인들의 민족구역이었다.

1990년 2월 고려인협회와 문화센터 대표들이 모여 「재소한인 자치영토 창건을 위한 사회, 정치 및 기술, 경제 논거 강구 및 작성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공화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지로서 하바로프스크와 연해주를 선정하였다. 이곳이 선정된 것은 개발이 늦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강제이주 이전 한인들의 거주지였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가 다른 민족과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인의 자치주 운동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자, 동년 5월 「전소고려인협회」 창설 당시 자치주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한인자치구 문제는 고려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으로 남아 있지만, 자치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즉, 자치구의 구상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대거 이주를 상정하고 있는 데, 이는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의 고려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 시켜 고려인들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자리 잡은 한인

들이 빈손으로 연해주에 이주하여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연해주에 와서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는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한인들에게 자치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1998년 연해주지사는 「연해주에 소재한 해체된 군사도시를 연해주 고려인재생기금에 이양하여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는 공문을 고려인 재생기금 앞으로 보냈다. 이는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고려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환영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따라 브즈드니젠카, 라즈돌노예, 포포프카, 플라토노보, 오레호보 등 5개소가 고려인에게 주어졌다.

V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비교분석 : 정책적 함의

1. 공통점

가.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¹⁶⁵ 첫째, 세계화시대 경제·문화적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냉전 붕괴이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한민족 역시 국내외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내의 한인들이 냉전적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조총련과 민단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해졌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국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넷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는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대한 열기를 증진시켰다.

나. 다양한 정체성

국가별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국가 내에서도 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¹⁶⁶ 예컨대, 이주 1세대와 이후 세대 간에는 정체성 보존과 현지동화의 정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거주국 정부의 동화정책과 다문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정체성 보존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이

¹⁶⁵ 정영훈,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p. 12.

¹⁶⁶ 이종훈, “한민족공동체와 한국 정부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12권 2호 (2002), p. 69.

주할 시기의 모국 문화를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인사회는 유사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민족 정체성은 현재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거주국의 시민권을 갖은 사람과 영주권만을 가진 사람 간에도 이질감이 존재한다.

다. 이중 정체성

해외 한인들은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나는 거주국에 대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며, 또 하나의 이중 정체성은 남한과 북한 어느 쪽과 보다 동질감을 느끼는가이다.

남과 북 어느 쪽과 더 동질감을 느끼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외동포들은 대부분 남과 북 양쪽에 정체성을 갖고 있다. 냉전 시기 중국과 소련에서는 이념적인 문제로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였으나, 냉전 이후 한·중 수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고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으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남한과의 정체성이 강해졌다. 특히, 남한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거 진출하고 한류열풍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정체성이 북한보다 강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일본 내 한인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과거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약화되었다.

해외 동포들은 거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주국 국민으로서 해외 동포들은 현지사회에 동화되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언어, 문화 등에 있어서 현지 적응도를 높여야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과제는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인들은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적 자각이 지나칠 경우, 현지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의 경우 부유층의 이민 2, 3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백인동네에서 자라고 사립학교를 다

니며 자신들을 소수민족이 아닌 백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겪으며 소수민족임을 자각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히며 한국학생회에 가입하여 한국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다.

한민족 공동체 형성은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에 한국이 중심이라는 우월주의는 자칫 해외 한민족 사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한민족 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민족 사회의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라. 한민족 정체성의 약화현상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결혼 등에 있어서도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나, 일본과 중국의 한민족 역시 최근 정체성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일한인 1세들과 달리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보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민단계 청장년 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서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민단계 젊은 세

대들이 민단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소극적 참여 또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민단은 조직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조직기반의 침하에 따른 조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민단계 민족학교는 재정난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으며, 민족교육의 침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강한 중국의 한민족 사회도 최근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의 탈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 그리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내 한민족 20-30대 여성의 20% 정도가 한국으로 시집을 떠나, 조선족 마을의 미혼 청년 남녀의 성비가 20:1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족의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는 조선족 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 유지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보다는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해야 대학입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민족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내 한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유의 종교와 민족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민족 자치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나 조선인이 아닌 중국인 혹은 러시아인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한인들 (특히 민단계 한인들) 역시 일본에 귀화하고 싶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민족 문화 공동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차이점

가. 민족정체성 및 한인 사회의 동질성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간다는 세대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민족 정체성 및 한인 사회의 동질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약한 반면, 중국은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¹⁶⁷ 한편, 일본은 탈냉전 이후 민족 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일본의 한인 사회는 좌우로 나누어져 대립하여 왔다. 1955년 북한의 지원 아래 재일한인 사회의 좌파세력을 재결집하여 등장한 조총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민단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복송사업 등을 전개하여 재정과 조직면에서 민단보다도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나아가 조총련은 일본의 정계와의 관계도 공산당의 범주를 넘어 그 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내부 권력의 후유증, 재정적 기반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조총련계 지식인의 반발, 북한 지상 낙원론의 붕괴 등과 더불어 민단이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반면, 민단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즉 일본 내 한인사회는 일본사회의 차별대우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한인 신분을 숨기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이민 1세대들과 달리, 이민 3, 4세대들은 한국어도 전혀 하지 못하며 일본으로 귀화하여 완전히 한인으로서의 민족 정체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에 의해 모국어를 상실하고 철저하게 러시아화를 거쳤다. 그러나 연해주의 한인사

¹⁶⁷ 위의 논문, p. 68.

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뿐만 아니라 사할린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신, 남한 출신 등 다양한 한민족이 살고 있으며,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3국 중 민족정체성은 가장 약하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한인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 덕분에, 조선족 사회는 모국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으며 모국어를 보존할 수 있었다. 결혼도 대부분 조선족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중국내 한민족 생활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 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다. 연변자치주 주도인 연길은 중국 전역에 분산된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로서 여기서 한국어로 출판되는 신문·잡지 그리고 한국어로 방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중국내 한민족의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1996년 중국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연변대학은 해외 한민족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1958년 9월에는 장백조선족 자치현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조선족 집거 지역에 8개의 자치진과 34개의 자치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은 동북3성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다. 산해관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 인구는 조선족 총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20만 명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해외 노무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족의 해외진출은 한국, 러시아, 일본, 리비아, 사이판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해외 노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조선족은 20여만 명에 달한다. 중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은 청도, 선양 등지에서 새로운 집거지(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치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한민족 사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한민족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의 코리아타운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인 사회는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진출하고 있으며, 학계나 경제계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일본의 한민족 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직업이나 업종 그리고 전체 국민 대비 평균 소득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다.¹⁶⁸ 일본 한민족 사회의 경우 자영업으로는 식당, 오락업, 철공업, 유리공업, 비닐화학공업, 잡화상, 식품점을 주로 경영하며, 이 외에 사무원, 단순노동자, 판매업 종사자, 운수통신업 종사자가 많다.

중국 한민족 사회에서는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많다. 중국의 한민족 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자본의 동북3성 진출과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상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상해, 북경, 청도 등지에도 조선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고 있다.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과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체류하는 조선족의 수도 상당수가 있다.

러시아 한민족 사회에서는 주로 농업과 상업 종사자가 많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민족 사회가 동요하면서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한인의 급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중앙아시아의 한민족들은 기존에 무엇을 했던 간에 연해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¹⁶⁸ 위의 논문, p. 70.

법적 문제와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이주 고려인들의 사회경제적 신분이 매우 낮다.

다.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동북아 3국의 한민족 사회가 한민족 공동체에 갖는 관심은 유사할지라도, 그들의 실질적 참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 정도와 한민족 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¹⁶⁹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는 재일동포에 비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훈련도 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참여 요청을 받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일본에 비해 거주국의 눈치를 보다 많이 살피게 될 것이다.

한민족 정치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흔히 제기되는 재외 동포 참정권 문제도 민주주의가 덜 발전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민족분열 행동으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러시아나 중국은 자국 내 한인사회를 완전한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행동이 다른 소수민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치적 민주화가 발전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참정권에 보다 적극적이다.

연해주의 한인사회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해오는 고려인들이 경제적, 법적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 고려인들은 민족정체성이 가장 약하며 연해주를 떠나 한국으로 오길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중국의 한인사회는 민족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체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¹⁶⁹ 위의 논문, p. 72.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중국』. 서울: 통일원, 1996.
- 김종국. 『세기교체의 시각에서 본 중국 조선족』.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99.
- 리홍우. 『조선족의 전망』. 하얼빈: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7.
-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 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서울: 백산서당, 2002.
- _____.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 이문용. 『세계의 한민족 일본』. 서울: 통일원, 1996.
- 전준. 『조총련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72.
- 정신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9.
- _____. 『중국 조선족』. 서울: 신인간사, 2000.
- 정판룡. 『세계속의 우리 민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6.
-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3.
- 홍승직 편. 『연변조선족자치주연구』. 서울: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88.
- 연변인민출판사. 『조선족간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56.
- 중국통계출판사. 『연변통계년감』. 중국통계출판사, 1998.
- 동북아평화연대 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2004.
-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 자치주개황』. 연길: 연변인

- 민출판사, 1984.
- 재일본 조선인총련연합회. 『총련』. 조선신보사, 1990년 12월.
-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社, 1957年 6月.
-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 森林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東京: 法務研修所, 1955.
- 李瑜煥. 『재일한국인60만』. 東京: 洋洋社, 1971.
- 胡兆量 主編. 『中國區域發展導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イム・チョンスク. 『在日僑胞たちの法的地位』. ピョンヤン, 1990.
- 『中華人民共和國民族自治區自治法』. 北京: 法律出版社, 2001.
-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第3次 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
東京: 在日韓國人青年會 中央本部, 1994年 2月.

2. 논문

- 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제10호.
- 김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호.
- 박창욱. “조선족공동체의 력사, 현황과 전망.” 국제고려학회아시아분회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00.
- 반병율.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집. 2003.
- 배정호.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남북관계.”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第5卷. 統一院, 1994.
- _____.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신상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의 의미, 의도,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2004년 2월호.
- 심현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 『한국시베리아연구』. 제4집. 2000.
- _____.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 유수정. “연해주에 대한 이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자료집』. 2004.
- 이광규. “고려인 이주 140주년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준) 발족·러시아 극동 문서자료집 발간 기자회견 및 심포지움. 『동북아시아, 한러관계와 고려인』. 2004년 10월.
- 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1972.
- 이정춘. “위성방송과 남북화합.” 『방송연구』. 겨울호. 2001년 12월. <http://jcrhie.pe.kr/index/4article/article01.htm>.
- 이종훈.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한민족간 교류협력실태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8호.
- _____. “한민족공동체와 한국 정부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12권 2호. 2002.
- 이진영. “러시아 연해주 조선족 이주민 집거지역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세계화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구축』. 2004년 4월 29일-30일.
-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12권 2호. 2002.
- 정관룡. “세기교체와 중국 조선족 가치관의 변화 및 민족전일체성문제.” 박민자 편. 『중국 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0.

- 최영관·임채완·김재기·김강일. “한국통일과 중국 동북3성 조선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권 제3호. 2001.
- 최우길. “중국 조선족사회와 교육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1998년 12월 3일.
- 허동찬. “조총련 교육.”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2004년도 한국교육원 현황.” 2004년 6월 18일.
- 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研究』. 1997年 第6期.
- 鄧小平. “目前的形勢與任務.” 『鄧小平文選』. 1975-1982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安夢弼. “日本の在日朝鮮人政策と日本.” 『美蘇研究』. 第7輯. 1994.

3. 기타자료

-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민족문화자치회』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 김 류보비 이와노브나 변호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5일.
- 김 빅토르 알렉세예비츠 『고려인재생기금』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 김영만 전 연변자치주 상무위부주석 현지인터뷰. 2004년 6월 15일.
- 김종국 교수 겸 연변해외문제 연구소 부소장 면담 내용. 2004년 6월 15일.
- 박민자 중국연변가정연구소 소장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 박창욱 연변대 민족문제연구소 교수와의 현지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 박희수 한국교육원 원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7일.
- 연해주 새마을운동센터 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 우정마을 촌장 강발레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4일.
- 류은규. “중국 조선족 이주사 (1)(2)(3).”

http://hanminjok.or.kr/cgi-bin/technote/read.cgi?board=chosunjok-pds&y_number=2.

Gorchakov, Victor V. 연해주 정부 경제부지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17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F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